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 840. 1114 FAX. 041. 840. 1129 <http://www.cni.re.kr>

충남 열린

2019 SPRING
Vol.86

권두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특집 |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3·1운동의 '혁명적' 역사성을 읽는다
 3·1운동과 유관순, 그리고 100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논단

도시벽화의 활용방안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발행일 2019년 3월
발행인 윤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이인배
편집위원 오혜정, 강미아, 박해은, 여형범,
오용준, 홍종남
에디터 이유나
주소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이메일 <http://www.cni.re.kr>
편집·제작 송일미디어그룹(주)

문의사항은 iyayu77@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대한민국을 넘어 한태평양의 중심 지역으로
세계 속의 충청남도를 꿈꾸는 곳

충청남도의 미래와 220만 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우리는 충남연구원입니다.

2019 **SPRING Vol.86**

CONTENTS

04	권두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06	특집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1. 3·1운동의 ‘혁명적’ 역사성을 읽는다 2. 3·1운동과 유관순, 그리고 100년 3.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20	논단 1. 도시벽화의 활용방안 2.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40	충남의 섬 희귀새가 날아드는 철새들의 낙원, 유부도
44	충남시장플러스 3·1운동 100주년, 역사적 의미와 함께하는 예산 덕산 시장
48	열린마당 1. 우리 모두의 3·1절 100주년을 위하여 2. 천안·아산 지역 도래 월동 독수리에 관한 고찰 3.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화와 권리찾기 지원의 체계화를 위하여

60	해외리포트 도심 속 폐교가 창업보육시설로 부활하다
64	상생과협력 수상태양광, 과연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70	오피니언 1.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2. 3·1운동 남북기념사업, 천안시가 내놓은 뜻

74	충남 소식
76	연구원 소식
79	충남의 사계

卷頭言
권두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우성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역사 속의 재외동포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3·1운동을 포함해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역할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동포들은 각 나라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중국에서 대대적인 항일 독립 운동을 진행했던 동포들은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국권을 되찾고자 노력하였다.

맹렬하게 독립투쟁을 펼치던 연해주의 동포들은 소련의 소수민족억압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였다. 또한 일본으로 끌려간 동포들은 징용 등 각종 전쟁범죄로 희생양이 됐지만 이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세계의 동포들은 민족정체성을 잃지 않고 조국 독립운동에 힘써왔으며,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애국심을 보였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의 희생과 노력이 더해져 얻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재외동포들을 기억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앞으로의 100년을 위하여

앞으로의 100년은 하나된 한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한반도는 평화의 바람과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일은 남과 북이 이뤄내야 하는 사안이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재외동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자 내일이다.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처럼 내외동포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특집

100년의 역사, 100년의 미래

- 01 3·1운동의 '혁명적' 역사성을 읽는다
- 02 3·1운동과 유관순, 그리고 100년
- 03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01

특집1

3·1운동의 '혁명적' 역사성을 읽는다

윤경로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위원회 기억기념분과 위원장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날이 막 지났다. 이 같은 의미 깊은 100주년 기념행사에 직간접으로 참가하면서 머리 한쪽에 맴돈 생각 하나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그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다. 3·1운동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생각할 때 타율적 개항이후 전개된 그 많았던 '운동들'의 하나로 보는 것은 3·1운동의 역사성을 낮춰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3·1운동은 개항 이후 타율적으로 진행된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형태의 수많은 세류(細流)들, 곧 여러 모양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쌓여 1919년 3월 전 민족과, 전 계층이 함께하여 '큰 강' 곧 대하(大河)를 이룬 대사건이라도 정의해왔다. 우리 역사학계에서 이 사건을 한국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시대구분의 분기점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3·1 대사건'이 지닌 남다른 역사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익히 아는 대로 1919년 '3·1만세사건'의 사건 당시 명칭은 '소요' 혹은 '폭동'이었다. 마치 1894년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꺾기한 동학농민혁명을 과거 '동학난'이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대 지배층 혹은 기득권층에서 볼 때 그것은 '폭동'이고 '난'이었다. '동학난'이라는 용어가 사건 당시는 물론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도 '난'으로 불렸음은 당시 역사인식이 그만큼 치자(治者)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은 해석학이다'라는 말이 있듯 지난 과거의 사실(事實, facts)은 변할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史實, historical facts)에 대한 역사인식은 앞서 언급한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듯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3·1운동'이라 지칭해 온 것을 '3·1혁명'으로 바꿔보자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는 지칭해 온 선례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즉 해외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 진영에서는 일찍부터 '3·1혁명'이라 지칭했었다. 1920~30년대까지는 '3·1운동'과

‘3·1혁명’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보다 본격적인 독립전쟁과 혁명적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3·1운동’에 대한 인식도 더욱 고무되어 이후로는 이를 프랑스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비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혁명’이라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예컨대 1938년 중국 장사(長沙)에서 거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관한 3·1절 기념식에서 그러했고, 같은 해 4월 〈조선민족전선〉 창간호 기사에도 ‘3·1대혁명’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1941년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 기관지인 〈光復〉 1941년 2월 창간호에서도 3·1운동을 “1919년의 전민(全民) 대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후 ‘대혁명’이라는 명칭을 자주 볼 수 있다. 1943년 6월 재 창간된 〈獨立新聞〉 창간호에서 “세계 제1차 대전 후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3·1대혁명운동이 발생했다”라는 요지의 창간사를 실었다. 그리고 이후 기사에서도 ‘3·1대혁명’이란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방 직후에도 변함없었다. 이승만과 김구 등의 연설에서도 ‘3·1혁명’ 혹은 ‘3·1대혁명’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제헌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초안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이 제헌의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3·1혁명’이 ‘3·1운동’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3·1운동의 명칭은 ‘소요’에서 ‘운동’으로 다시 ‘혁명’으로 그리고 다시 ‘운동’으로 회귀한 것이다. 역사적 용어 채택은 매우 중요하다. 엄혹하고 치열했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3·1운동’이 지닌 역사성은 ‘운동’ 차원을 훨씬 넘은 ‘혁명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민족내부의 기존체제를 전복한 ‘혁명’은 아니지만 누천년 내려오던 봉건왕조의 ‘제국(帝國)에서 백성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세운 역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3·1혁명’이라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 사례로 중국의 경우 1911년 신해년(辛亥年)에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중화민국(中華民國)이 탄생했다. 즉 여러 천년간의 봉건왕조를 마감하고 1911년 민국(民國)을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신해혁명’으로 역사화했다. 다시 말해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봉건왕조와 왕권을 종식시키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중화민국이 탄생되었기에 이를 기리어 ‘신해혁명’이라 지칭한 것이다. 이점에 주목할 때 중국의 신해혁명과 우리의 ‘3·1혁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중국은 혁명이라 하는데 우리는 왜 ‘운동’이라 하는가. ‘3·1혁명’이라는 큰 강(大河)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그 많은 잔물줄기(細流)를 지칭하는 ‘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3·1운동의 ‘혁명적’ 의미를 요약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는 점이다.** 3·1혁명 이후 왕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며 복벽파는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帝國’에서 ‘民國’으로, 그래서 主權在民의 대한민국 탄생을 가능케 했다.

둘째, 평민과 서민 그리고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민족대표 33인은 예외 없이 모두 평민, 서민 출신이었다. 또한 만세시위 참여 층을 보면 남녀노유 등 전 사회계층이 모두 참여했는데 특히 여성들 예컨대 여학생들과 농어민 여인들 그리고 전국 규모의 기생과 어촌의 해녀 여성들이 만세시위에 대거 참여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 신분적으로 천시되었던 백정, 광대, 광부 등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적극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보였던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3·1혁명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수다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무관학교와 독립군을 찾았다. 이들은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사들로 거듭났다.

넷째, 좌우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초기 임시정부가 그러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 지향은 일제의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통합, 통일국가 수립의 여망으로 맥을 이어나갔다.

다섯째,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孫文)이 독립선언에 이은 만세시위를 ‘혁명’이라 평가하였으며,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조선을 가리켜 ‘동방의 등불’이라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항쟁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3·1정신은 민족이 당면했던 자주독립이라는 목표와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인 동시에 반봉건적 민주혁명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3·1항쟁이 배태하고 있던 이러한 혁명성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정강 정책에 반영되고 항일세력 전체의 시대정신으로 발전 확산되어 갔다는 측면에서 선언적 차원을 넘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할 것이다.

항일세력이 공유하였던 3·1정신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해방 후 제헌헌법에서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으로 관철되고 있다. 또 ‘촛불’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명제도 사실 그 원천을 3·1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없었다.

3·1항쟁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아니면 혁명적 운동인가? 서구 학문의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항일세력이 왜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수용하였는지, 또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개념이 어떻게 실종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전향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친일인면사전을 편찬해 낸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2014년 2월 처음으로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 창립을 주도하고 매년 심포지엄과 전시회를 여는 등 ‘3·1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애써왔다.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 연구용역을 수임해, 시민들이 주역이 되는 대대적인 100주년기념사업을 기획,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제 ‘3·1혁명’ 100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때다. 여기에서 향후 전개될 기념사업을 일일이 거론할 여유는 없지만, ‘3·1혁명’의 위상 재정립만큼은 다시 강조하고 싶다. 자국사에 대한 국수주의적 과대평가도 문제이지만 스스로 폄하하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됐던 독립투쟁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 진영과 재외동포들의 정신적 지표였으며 외국에서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3·1혁명’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물가치적인 3·1절이라는 명칭도 ‘독립선언기념일’ 또는 ‘3·1혁명기념일’로 변경해 볼 것도 주문해 본다. 또한 3·1정신의 요체라 할 민족대단결의 뜻을 살려 남북화해와 평화구축의 전기가 보다 속히 마련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민주공화정 수립 100년의 시점에서 과거를 성찰하는 한편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100년을 설계하고 전망을 세우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때다. ‘촛불혁명’과 ‘3·1혁명’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역사의 동시성’이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02

특집2

3·1운동과 유관순, 그리고 100년

박종선 |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소장

우리는 해마다 한겨울의 추위가 가시고 봄소식이 무르익을 즈음 어김없이 3·1절을 맞이한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통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쳐 항거한 거족적인 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날의 함성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울려 퍼질까? 반문해 본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운동임에 틀림없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파고다공원에서 청년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 시위를 기점으로 3월, 4월 말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만세시위가 일어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의 독립시위운동으로 번져 나갔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파급되어 만주에서는 3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에 서간도·북간도·훈춘지방을 중심으로 수천 명 또는 1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독립축하회 또는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미주지역에서는 국내의 3·1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3월 15일 대한민국 민회 중앙총회에서 미주·멕시코·하와이 재류 동포 전체대표회의를 개최하고, 4월 14일~16일까지 3일간 필라델피아의 미국 독립기념관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하고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3·1운동은 국내 방방곡곡은 물론, 국외에서도 한국인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3·1절, 3·1운동하면 유관순(柳寬順)열사를 떠올린다. 유관순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소제(李少悌) 사이의 3남 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유관순의 집안은 개신교 신자였던 할아버지 유윤기(柳潤基)와 숙부 유중무(柳重武)로 인해 일찍이 개신교 집안이

되었고, 유관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사회개혁, 부녀자 계몽, 교육사업 등을 통해 자주독립의 길을 찾고자 흥호학교(興湖學校) 운영에 가담하여 인재 배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자녀 교육에도 적극적이었다. 큰 아들 유우석(柳愚錫)은 공주 영명학교에서, 둘째 딸인 유관순은 서울 이화학당에서 수학하였다.

유관순의 고향은 철도가 부설되기 전 서울과 충청남도 공주를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개신교를 전파하던 곳이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지령리에도 1901년경 이미 교회가 들어섰으나, 1907년 8월 국채보상운동에 이 교회가 동참하는 등 애국활동을 펼치자, 그 해 11월 일본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유관순의 일가인 유빈기(柳斌基)는 케이블(E. M. Cable, 한국명奇遇富) 선교사와 함께 고향에 개신교를 중흥시키고자, 1908년 조인원(趙仁元) 등과 함께 불타버린 지령리 교회를 다시 세웠다. 이후 숙부 유중무가 선교사로 교회를 이끌면서 유관순도 5~6세를 전후하여 개신교를 접하게 되었다.

유관순은 1916년 샤프(Alice Hammond Sharp, 한국명史愛理施)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비 유학생으로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하였다. 이후 서명학(徐明學), 이정수(李禎洙), 사촌 언니 유예도(柳禮道) 등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유관순은 1918년 3월 18일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

탑골공원에 배치되어있는 유관순열사의 독립운동 모습





2019 '독립' 랭귀지 페스티벌

하고, 같은 해 4월 1일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문회(以文會)를 중심으로 오후 3시만 되면 모두 수업을 중단하고, 조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와 시국토론회 및 외부인사 초청 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는데 유관순도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1919년 1월 22일, 광무황제가 서거하자 학생들은 자진해서 상복을 입고, 휴교에 들어갔으며, 2월 28일에는 정기모임을 통해 전교생이 적극적으로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이화학당 학생인 신탁실(申特實), 노예달(盧禮達) 등은 파고다공원에서 벌어진 3·1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하였고, 당시 고등과 1학년인 유관순은 서명학·김복순·김희자·국현숙 등과 함께 '5인의 결사대'를 결성하여, 소복을 하고 기숙사를 빠져나와 대한문 앞에서 망국(望哭)을 한 뒤, 남대문으로 향하는 시위 행렬에 합류하였다. 이후 3월 5일, 학생 연합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화학당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낸 학교 측은 교문을 잠그고, 교사들로 하여금 교정 곳곳을 지키게 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중 신탁실·유점선·노예달 등은 검거되었고, 교사 김독실(金篤實) 등은 투옥되었다. 이날 유관순도 만세를 부르다가 일경에 붙잡혔으나 곧 석방되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학교로 갈 수 없게 된 유관순은 13일 기차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부친 유중권과 조인원 등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내놓으며, 아우내 시장에서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상의하였다. 유관순과 사촌 언니 유예도는 만세운동에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1919년 4월 1일, 조인원·유중권·유중무 등과 함께 아우내 시장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이 바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이날 유관순의 부모를 포함하여 19명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하였으며, 3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하였다.

유관순은 주도자로 체포되어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곳에서 공주 영명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된 친오빠 유우석을 만나기도 하였다. 5월 9일,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받았고, 경성복심법원으로 넘겨져 6월 30일 3년형을 언도받았다. 함께 재판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일제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은 유관순은 상고하지 않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이신애, 어윤희 등과 함께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하여 만세 소리가 밖으로까지 퍼져나갔고, 만세를 외치는 함성에 형무소 주위로 인파가 몰려들어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은 물론, 많은 애국 지사가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1920년 4월 28일 영친왕(英親王)의 결혼 기념 특사령으로 유관순의 형기도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으나, 오랫동안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유관순은 18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이화학당은 형무소 당국에 유관순 시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화학당 교장 월터(Miss Jeanette Walter)는 이 사실을 미국 신문에 알려 세계 여론에 호소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결국 일제는 해외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장례는 극히 조용히 치러야 한다는 조건으로 유관순열사의 시신을 인도하였다.

1920년 10월 12일, 유관순의 시신이 이화학당으로 돌아오자 학생들은 통곡으로 맞이하였다. 시신은 이화학당 수위실에 안치하였고, 세브란스 교의를 불러 수습하였다. 직접적인 사인은 밝혀지





지 않았으나, 모진 고문과 영양실조 등으로 추정한다.

10월 14일 이화학당 측은 정동교회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이태원 공동묘지에서 조촐히 장례를 지냈다. 이후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유관순의 묘는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으나 실전(失傳) 되었고, 현재 유관순 생가의 뒷산인 매봉산에 초혼묘(招魂墓)가 봉안되어 있다.

1920년 1월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작성한 '망동사건처분표(妄動事件處分表)'를 보면 1919년 3·1운동 주동자로 일제 검찰에 송치된 종교를 가진 피검자 중에서 기독교인은 총 3,065명으로 51.2%를 차지하였다. 특히 여성 피검자의 65.4%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여성 피검자 중 95.1%가 기독교여성이었다.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여성 중에서는 기독교 여성이 3·1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3·1운동을 '망령된 행동'이란 뜻의 망동(妄動)으로 비하하였고, 지방 법원별로 검사국에 의한 수리(修理) 인원(일제경찰에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피검자를 말함)을 집계하였다.

민족사학자요, 대한민국임시정부 2대 대령을 역임한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의하면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독립 시위 상황은 집회수 1,542회, 참가 인원 2,023,098명, 사망 7,509명, 부상자수 15,961명, 피체자수 46,94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도시의 집회만 조사된 것이고, 지방에서의 소규모 시위와 1919년 5월 이후 간헐적으로 계속된 시위를 감안하면 실제 집회 수와 참가자 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3·1운동은 일제가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이후 9년간 자행해 온 식민지 무단통치와 한민족말살정

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켰다. 또한 3·1운동의 결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었고, 입헌민주공화제가 시작되는 민족사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만주, 노령 등지에서의 무장투쟁을 강화하고 촉진시켰다.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데 있다. 또한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이 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중국, 인도, 인도차이나, 필리핀, 이집트 등의 약소민족독립운동 대전환 계기를 열어준 세계사적인 독립운동이었다. 3·1운동은 당시 인류의 4분의 3에 달했던 약소민족에게 자각과 용기를 일깨워준 횃불로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샤타야그라하 사브하(진리수호)운동'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던 것이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의 소원이 통일이 성취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남북화해와 협력,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져 한민족 모두의 가슴을 눈물로 적시게 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심한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었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뜻깊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우고 3·1정신의 숭고한 이념을 가슴속에 되새긴다면 어떠한 역경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03

특집3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년, 그리고 앞으로의 100년

조성오 | 천안시 동남구 문화원 원장

과거 :

3·1운동의 시작과 의의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수많은 순국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후손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100년 전의 그때, 잠시 눈을 감으니 수많은 함성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그리고 이내 스스로 숙연해져 본다.

필자는 요즘 이 지역 문화원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문턱 앞에 놓여있다. 이유는 올해가 3·1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본원이 위치한 지역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유관순열사가 3·1만세 운동을 주도하여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운 아우내장터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은 1919.4.1에 거행되었다.)

본래, 3·1운동의 근원은 국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18년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의 윌슨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각 민족은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그 후, 1919년 일본 본토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우리민족 학생들이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일으킨 중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민족대표33인이 태화관이라는 식당에 모여 3·1독립선언서(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축배를 들며 만세삼창을 외치는 순간, 모든 민중들의 피와 심장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때라고 추측된다. 이를 계기로 전국으로 만세운동이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고, 추후에 언급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3·1운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1919년부터 국내외 정세는 격동의 연속이었다. 고종의 승하, 임시정부수립, 임시헌장제정, 의열

단 결성, 신흥무관학교 설립 등, 이와 같이 국내에 끼친 영향을 봐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의 시작이 가져온 의미와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 게다가 국외로 시각을 돌려본다면, 우리나라의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운동, 베트남과 필리핀의 민족운동에 자극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3·1운동 100주년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교훈을 현대사회의 모든 세대들이 가슴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고, 수많은 희생에 후손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현재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중요성 고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이것은 역사적 혁명이다. 왕정의 나라가 철폐되고 공화제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1910년 8월 22일 치욕적인 한일병합조약으로서 황제(융희)는 나라를 포기하였고, 민중은 도탄에 빠졌다. 고종이 이룩하고 순종에서 끝을 맞이한 십 년 남짓의 대한제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대한제국은 여전히 조선시대와 같이 왕을 위한 나라였음을 모를 리가 없다. 바뀌어야 한다. 세계정세도 바뀌고 있었다. 민중을 위한 나라가 필요했다.

개인이 아닌 공공의 것이 주체가 되는 나라.

1919년 4월 11일, 일제의 감시가 심한 국내는 배제하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3·1운동이 시작된 지 1달 남짓 된 기간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지만,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은 여전했다. 만세운동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독립활동과 새로운 국체에 대한 구심점을 잡아줘야 할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여기저기서 새어 나왔다. 그것이 바로 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큰 이유이다.

유관순열사 사생대회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은 유관순열사의 순국일(9.28)에 맞추어 매년 백일장사생대회 공모전과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 천안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관순열사 및 순국열사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사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은 작년(2018년)까지 4월 13일이었는데, 100주년이 되는 올해(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당하고 나서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동안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위해 무수한 노력과 다양한 계획을 실현해 나갔다. 그 기간 동안에 민중과 국민을 위한 국가의 체계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 문단 첫 줄에서 언급했던 공화제 체제의 국가 말이다. 특히나,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문의 일부전문을 보면, 황제권이 아닌 주권 혹은 민권을 실현해 내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 위대함과 이상적 국가체계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나라는 강제조약을 당하였지만, 우리 민족의 주권은 소멸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고결한 내용이다. 그래서 조국의 독립이 이룩된다면 하나뿐인 목숨마저 험사리 버릴 수 있는 그 숭고한 의지까지 전달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의 제1조의 내용이다.(1919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이다.(1987년)

지금 헌법의 뿌리가 임시헌장에서부터 고스란히 이어져오고 있고,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과 더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100주년을 맞이한 셈이다.

게다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임시헌장 제3조의 내용은 신분제가 폐지(1894년 갑오개혁)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이 주체가 되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로서의 선언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제에 대한 저항과 격변의 시대에 살았던 그때를 되돌아보니, 이는 실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의 무자비하고 야만적 행태에 우리는 끊임없는 항거를 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국민이 가야 할 방향과 소명을 심사숙고하게 고민하고 열망했던 것이다. 그런 선조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끝없는 존경을 드리는 바이다.

미래 :

역사적 의미에 대한 우리의 자세

편리하고, 빠르고, 다양하고, 급변하고 있는 지금의 현대사회.

한 세기 전에는 외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불과 반세기 전에는 수많은 빈곤국가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사회 전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만큼 선봉에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래서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겐 그만큼 처절하고 야속했던 어두운 역사의 잔상을 지우기 위해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정면만 향하여 나아갔나 보다.

지금 시대를 살아오는 우리에게 역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앞선 글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짧은 문구는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 눈물 이 결실로 귀결된 결과물의 내용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문구들에 함축된 역사의 무게감과 인고의 과정은 오로지 국민들과 후손들을 위함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즈음 매스 미디어에는 일본과 관계된 과거사에 대한 미화, 유력인사들의 망언, 역사의식이 결여된 신사참배 등의 기사와 방송에 꼭 언급되는 유명한 문장이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이셨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다. 역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문구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했던 과거와 역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훈을 되새기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회피하고, 덮어버리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로만 보인다. 반성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뻔어갈 수 있는 스스로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이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맡은 위치에서 역사적 소명을 이행해 나가며, 더불어 과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상의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교육을 더 활발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체가 갖는 깊은 역사와 그 의미를 대대손손 계승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단재 신채호선생의 말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있는 비석이다’

01

논단1

도시벽화의 활용방안

이충훈 |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형복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1) 배경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대해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벽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벽화사업은 소외 계층에게 다른 지역의 구성원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벽화는 도시이미지 개선을 넘어 범죄예방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대표적 수단 중 하나인 벽화마을 만들기는 환경개선에 따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관광객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목적

벽화사업은 지역경관형성에 있어 매력적인 경관요소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과도한 디자인요소 투입 및 홍보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경관을 저해시키고 오버투어리즘¹⁾ 등의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관리 소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행정적 측면에서도 벽화제작을 포함한 유지 및 보수 관리에 있어서의 뚜렷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으로 행정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과잉관광)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한 말로, 관광지에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현지인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논단

01 | 도시벽화의 활용방안

이충훈 |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형복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02 |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전지훈 |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2
개념정의

최근 지역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차원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도시벽화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벽화활용을 위한 도시벽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도시벽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주체들의 올바른 역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공공 디자인은 공공 미술(公共美術)과 어떻게 다른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린다는 취지에서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단, 공공 디자인은 아름답고 보기 좋게 가꾸는 일본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부분 까지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포함한다.

공공 미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기술자들이 도맡아 하던 일들에 디자이너가 먼저 기획하는 과정이 선행될 수 있다.

가령 디자이너가 교통 표지판이나 도로 이정표를 만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유쾌한 작품이 나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공 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되면 어느 마을에 가나 똑같은 마을 회관의 모습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정된 장소의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벽화와 거리미술(Street art)을 구분.

벽화는 지역의 역사성이나 주민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작품성과 보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거리미술은 도심의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작가만의 특별한 시각이 포함되는 미술이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그려진 ‘벽화’들은 벽화나 거리미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즉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온 공공미술이나 마을미술, 벽화사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3
대전광역시 벽화현황

1) 무지개프로젝트: 대동 벽화마을

사업명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Art in City 2007 - 새야새야 파랑새야 프로젝트
사업종류	일반공모사업
사업내용	벽화, 공공조형물, 놀이터 작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마을단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주최	문화관광부
주관	공공미술추진위원회
기간	2007년 7월 ~ 10월

표 1 | 대동 벽화마을 ‘새야새야 파랑새야’ 프로젝트 사업개요

무지개 프로젝트란 원주민이 그 자리에서 더 잘 살도록 종합적인 환경을 고쳐 주는 ‘동네 재생사업’으로 2006년부터 대전시에서 추진한 지역개발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다. 대동 벽화마을을 포함한 사업대상 지역들은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과 달동네 등 가난한 동네들로, 이들 지역에 주거환경과 교육환경개선 등 총 140여 개 사업 분야로 투자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복지와 건축, 교통, 교육, 문화 예술 등 대전시의 다양한 부서가 함께 참여하였다.



무지개 프로젝트 시행 전의 대동마을

무지개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가 「동네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취약동네 재생전략」이라 할 수 있다. 환경개선이 주목적으로 현지 주민중심의 취약동네 재생전략인 도시벽화와 관련이 많은 사업이다. 대동 벽화마을은 2009년 무지개 프로젝트 3단계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히 무지개 프로젝트의 주민 주도 마을가꾸기 사업 중 예쁜동네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벽화마을로 자리 잡게 된다.

(1) 추진과정 및 조성 이후

대동 벽화마을은 2007년 아트인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무지개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기관의 지원을 통해 조성되었다. 또한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오늘공공미술연구소’,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현재의 모습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와 공터 및 공원에 조성된 다양한 조형물까지 설치되는 등 낙후되고 소외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골목 비경’에 선정되었다.

대동 벽화마을 모습



대동 벽화마을의 지속적인 노력 |



2) 마을미술 프로젝트 ‘중촌동 거리미술관’

(1) 추진배경

대전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중촌동은 오래된 원도심 지역으로 오래된 역사만큼 쇠퇴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오래되고 낙후된 아파트가 일부 자리 잡고 있으며, 인근을 관통하는 철길로 인하여 범죄의 우려가 있는 우범지역도 다수 존재하였다.

(2) 추진과정 및 조성 이후

대전지역의 작가들이 모여 ‘L. O. V. E’ 라는 팀을 구성하고 중촌동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다. 낙후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마을주민과 하나가 되는 문화거리로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

그 결과 아파트 사이로 볼 수 있었던, 오래된 허름한 가옥들이 조형성 있게 ‘중촌동 갤러리’라는 테마로 변신하였다. 철길과 길을 따라 자리한 오래된 주택들의 벽면에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새로운 이미지의 동네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오래되고 낙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흉물스러운 굴뚝은 하나의 작품으로 변신하였다.

| 대전 중촌동 마을미술 프로젝트 |



3) 유성구 현충원로 새마을 동네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벽화거리 ‘새마을 동네’의 경우는 국립 현충원 건립 당시 조성된 마을로 2013년 담장 등 주거환경이 노후된 곳을 전문 미술작가들과 함께 이야기가 있는 벽화마을로 조성하였다. 이곳은 50여 가구가 남짓한 작은 마을로 기존 페인트만 사용한 벽화들과 달리 다양한 재료 및 조형물을 활용하여 집집마다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제작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집집마다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제작하였고, 벽화 제작과정에서 각 세대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작품이 위치한 세대원이 벽화를 보존해 나간다는 것이다. 1세대 1작품을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좋은 사례이다.



| 새마을 동네 벽화사례1 |

- 1_ 부착형 돌출 벽화
- 2_ 자기질 모자이크 벽화

4

도시벽화의 활용 방안

| 새마을 동네 벽화사례2 |

조형물 부착 벽화



1) 제도개선 전략

벽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은 부재하다. 다만 연관성이 있는 법률은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진흥법이다. 자치법규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이러한 조례에서는 직접적으로 벽화에 대한 사항은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벽화의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활용되는 벽화가이드라인의 목표를 살펴보면, ①일관된 기준을 통해 벽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안내를 제공함으로 뚜렷한 목표와 방향 아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②가이드라인의 지침 아래 무분별한 벽화제작이 아닌 공공질서가 있는 도시벽화 기준에 대한 기틀 마련으로 지역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③도시특성이 반영된 도시벽화 설치방향 제시로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도시벽화 종합지원 시스템 도입

도시벽화는 설치장소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여,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전문가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벽화제작자의 경우는 다양한 작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의 벽화시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컨설턴트에 대한 인력풀 마련은 벽화의 형태별 전문가, 시공전문가, 홍보전문가 등으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시벽화의 경우는 충분히 대전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판단된다. 즉 관련과의 퇴직교수, 퇴직교사, 큐레이터, 공공미술 관리자, 건축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서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하여 전문가 투입부터 심사지원, 작품제작, 유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주민참여 방안

벽화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인 노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주민들의 단계적 이해를 높여나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창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창작 기회를 통해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주민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소득 창출 증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도시벽화 투어가 보다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현장 방문 시 전문해설사 이외에 지자체 담당공무원, 작품을 제작한 작가가 함께 참여한다면, 벽화정책 소개에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작품의 스토리텔링이나 작품제작 경위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현장 주민과의 만남을 진행한다면, 주민참여에 대한 출발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다.

1) 도시벽화 아카이빙 도입

첫째. 도시벽화가 설치될 때는 작품명, 작가명, 작가약력, 프로젝트 매니저, 완성일, 설치지역, 관련 유지보수 정보, 제반정보(영상, 사진, 기록문서, 작업일지 등) 등이 기록화되어야 한다. 반드시 지역 내의 소관행정기관은 기록주체가 되어야 한다. 소관행정기관의 관리담당자는 벽화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술이나 디자인을 다루는 시의 전문기관(예: 지역디자인센터)이 직접 관리한다면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관리주체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지역환경을 잘 알 수 있는 민간조직과의 연대, 또는 지역경찰과 행정의 협업 등을 통해 순도 높은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전단지 부착에 의한 훼손, 쓰레기 등의 적재에 의한 가림현상, 의도된 훼손 등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 벽화의 모니터링 시에는 벽화의 노후상태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을 통해 관리의 소홀함을 예방하도록 한다.

벽화 아카이빙 사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아카이빙 작업결과물은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가 된다.

2) 사후관리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사업공모 단계에서부터 설치될 작품의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과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부터 장소공모의 경우는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벽화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지하였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현장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사후관리도 작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에게 작품의 수명(일몰기간)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작품의 수명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작품에 따라 설정해 놓은 보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작품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주민, 지자체가 원하면 합의해서 작품의 보존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하며, 이때 작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후관리 체제에 있어서는 사업 종료 후 담당 부서, 관리 장소, 관리 방법,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설치되는 작품은 작품별 명패와 입간판 설치를 필수로 하고, 지자체 담당 부서는 사업대상 장소와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연락처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벽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벽화마을은 그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지 개선 차원에 그치게 된다. 이화동 벽화마을과 홍제동 개미마을 모두 도시 빈민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거두었으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결여되어 마을산업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5

유지관리

6

도시벽화 시범사업 추진

1) 대화초등학교 벽화 시범사업

(1) 추진배경

환경개선 벽화그리기 사업지인 대덕구 대화초등학교 주변은 산업공단과 낙후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대화동의 주요 지역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대화 초등학교는 산업공단 성장과 함께 1982년 개교하여 37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이다. 기존의 구릉지를 일부 개발하다 보니 운동장의 한편으로 2.5m 이상의 옹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130m 이상의 긴 옹벽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정비가 요구됐다.



| 기존 대화초등학교 벽화상태 |

1차 옹벽벽화는 지역기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나, 제작 후 11년이 훨씬 지나 급격한 노후화로 학생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벽화의 퇴색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2018년도 대상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밀점검이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이자 면학공간인 통학로의 조속한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다수의 기관들이 대화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 대화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과정 |

1_ 환경개선 도색작업 | 2_ 벽화 제작수업 참여 | 3_ 벽화작업



사업명	민·관·학 협업 행복한 어린이학교 환경개선사업	
일시/장소	도색	2018. 11. 1.(목) ~ 2018. 11. 3.(토) 09:00 ~ 18:00 / 대덕구 대화동 대화초등학교
	조형물 시공	2018. 11. 20.(화) 09:00 ~ 18:00 / 대덕구 대화동 대화초등학교
참여기관/ 참여인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대화초등학교, 대전경찰련, 대전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화동 주민센터, 대전대덕경찰서, 대화초등학교 학부모회 등 9개 기관 100여 명 참여	
대상지 현황	대전 대화초등학교 옹벽 및 인근 주거지 일부 면적 201.7m ² (가로 107m, 세로 2.9m) 대전 안전주택 일부 담장	

| 표 2 | 대덕구 대화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개요

(2) 추진내용

대화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은 지역주민과 여러 기관들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총 100명의 인력이 함께 참여하고 계획한 사업으로 사전의 다양한 현장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실무협의를 통해 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계획, 설계, 시공에 대한 회의를 진행되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준법지원센터의 기획, 한남대학교와 대전대학교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벽화가 제작되었고, 지역의 관련기관들 구성원도 제작에 참여하여 대화초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7

도시벽화
디자인가이드라인(안)

1) 기본방향

벽화는 매력적인 도시를 형성하는 도시경관의 일부로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시대적 예술성을 지녀야 하며, 지역의 정체성 또는 미래적인 창의성을 지향하는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춤에 있어서 위배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도시벽화 디자인의 원칙으로는 공공성, 맥락성, 지속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2) 도시벽화 가이드라인의 원칙

도시벽화의 개선을 위하여 지켜야 할 8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 ① 도시벽화는 대상범위를 제한적으로 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한다.
- ② 벽화를 통해 쾌적하고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 ③ 현란하고 과장된 디자인은 지양하고 안정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④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저채도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⑤ 원형 훼손으로 인한 시각적 공해를 줄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나무, 타일 등 다양한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⑥ 스토리텔링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을 권장한다.
- ⑦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한다.
- ⑧ 어둡고 위험한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불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조명설치를 권장한다.

3) 적용대상 및 규정항목

공공의 공간, 건축물,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작 표현되는 도시벽화로서, 그 대상으로서 벽면은 물론 바닥면과 천정면을 포함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규정한다.

장소의 성격	대상이 소재하는 위치로서 가시권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
벽화의 형식	구상 또는 비구상 등 표현의 주제 여부
색채	주변 환경과의 색의 연속성과 조화성 여부
재료	지속성과 환경성을 고려
관리	유지, 보수 및 관리 방안 고려

Ⅱ 표 3 Ⅱ 적용대상 및 규정항목

도시벽화는 주제, 대중과의 소통 차원에서 기존의 공공미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벽화는 환경개선이라는 기능을 넘어 공간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다. 현재의 도시벽화는 ‘다양성’, ‘차별성’을 추구하고 참여를 모색하면서, 새로운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커뮤니티 아트’로 발전해가고 있다.

도시민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벽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미술은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소유되는 미술, 도시와 시민 공동체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속에 배치되어 공동의 관심을 찾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술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도시도 인간과 같이 공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간다. 건축과 도시환경은 인간 생활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서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맞물려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되고 있는 공공미술 또는 공공디자인 안에서의 도시벽화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벽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지역주민에게 생활만족도, 지역문화 향상도, 도시재생 정책 반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주민과의 소통 부재, 행정 운영상의 문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도시벽화는 일회적 사업이나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는 벽화가 행정기관을 통해 계획되고 수행되다 보니 정권 교체, 해당 기관장의 교체에 따라 정책과 사업의 변경이 될 위험성을 가

지고 있어 이 점도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도시벽화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벽화사업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고, 사업 후 지속적인 이슈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커뮤니티 결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벽화를 통해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도시벽화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김민정(2011), 주민의 참여를 통한 경관사업의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울산광역시 남구 사례를 대상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부치(2016), CPTED기반 벽화마을의 효용성에 관한 인과지도 구축 연구,한국과학예술포럼, 제26권.
3. 문희숙(2010), 공공디자인으로서의 환경벽화에 관한 연구 -포천시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제13권, 제1호.
4. 심영옥(2017), 주민 생활문화 기반의 마을 벽화 제작 의식 전환 필요성, 동양예술, 제35권.
5. 이유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2015.
6. 이충훈, 도시벽화 활용방안, 기관협업콜로키움 세미나 자료, 2018.
7. 이형복, 지역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벽화의 활용에 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2018.
8. 황순선(2015), 성수동 구두지역 활성화를 위한 벽화 일러스트 제작사례,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제45권.

n2

논단2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전지훈 |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1

돌봄과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흐름

근대 국가에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접근은 과거 빈민법(Poor Law)에 기반한 시설중심의 격리수용의 접근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 복지국가 시기의 돌봄서비스는 모든 사람은 국가라는 장치를 통해 집합적으로 서로 간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회권’의 개념이 기초가 된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쇠퇴와 함께 돌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상하였는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강조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시장의 창출이 강조된 것이 특징적이다(주은선, 2016). 특히 이 시기에 돌봄윤리(ethics of care)의 개념화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가정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영역이 사회·정치 제도 및 윤리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돌봄서비스 철학은 존재론적으로 관계와 의존에 의해 개념화되었고 이를 위한 사회적 책임성의 공공성이 함께 요구되었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이선미, 2016).

돌봄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가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들이 형성되었다. 특히 키테이(Kittay/1999)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촉발된 논의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보편주의적, 절차적 공공성의 기존 철학을 대체하는 돌봄 윤리학을 제시한다(김희강·강문선, 2010; 주현정·김용득, 2018). 이들에 의하면 돌봄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상호계약관계가 아니라 의존적인 개인들이 돌봄 관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형태라 보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요구하는 의존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되며 돌봄서비스를 어느 한 계층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책임을 공유하고 나누는 둘리아(duolia)원칙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Kittay/1999; 김희강·강문선, 2010).

2

돌봄서비스에서 커뮤니티의 주목

이러한 시장화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상호의존적 돌봄담론의 확산은 돌봄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조망함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고립화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관계를 강조하고 사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통합의 개념화와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에서 돌봄에 대한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상호의존적 담론은 돌봄욕구의 대응에 대한 분절화, 표준화에 대한 한계에서 등장하였는데 김은정(2015)은 돌봄에 대한 욕구는 일상생활의 영위 과정에서 생성되고 충족되며, 돌봄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진공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대면하는 관계를 통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무형적 휴먼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場)으로 지역공동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제도적으로 돌봄서비스는 현재까지 표준화된 관료제 방식으로 설계되고 실행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지예산과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나 체감성의 미흡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돌봄 및 공공서비스의 현재의 방식에 대한 보완 기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박경수 외, 2014). 이와 같은 보완기제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돌봄 및 공공서비스가 유연성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가변성과 시급성에 따른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였으며 공동생산을 위한 커뮤니티를 고려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김은정(2015)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으로서 지역공동체를 고려하는 것은 이 같은 돌봄서비스 공급의 통합성과 융통성을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공동생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돌봄서비스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서비스에 대해 지역사회 주체적 측면에서 참여하는 돌봄활동이 보완해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공동생산의 방식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신축적인 개념으로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힐러리(Hillery/1955)에 의해 공동체 요인에 의한 정의로 지리적 영역과 구성원 간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에 기반한 집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통적 마을개념이 사라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지리적 특성보다는 일상성에 기반한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및 소속감 등을 강조하는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티의 특성에 기반한 돌봄서비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제공되는 돌봄(care in the community)과 함께 공동체에 의한 돌봄(care by community)을 모두 의미한다고 본다.

특히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는 주민들이 함께 의사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는 공급자-이용자 간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한다는 특징이 있다(김형용, 2012). 그리고 커뮤니티적인 접근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주민)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인 집단(커뮤니티)이라는 집합적(collective)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집합적 의미에서 주체의 참여와 상

3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의 특징

호작용의 관계성을 주목한다. 따라서 기존의 돌봄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의 이분법적 체계에서 커뮤니티가 돌봄서비스의 대상이자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중간적 성격을 특징을 갖게 되며 김학실(2017)에 따르면 이는 돌봄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위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서비스에서 커뮤니티의 주목은 돌봄서비스에서 일방향이 아니라 주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며 사회적 의미의 장이자 주체로서 커뮤니티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커뮤니티를 주요한 돌봄서비스의 주체로 상정하는 돌봄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돌봄서비스의 실행방식 측면과 공간 특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념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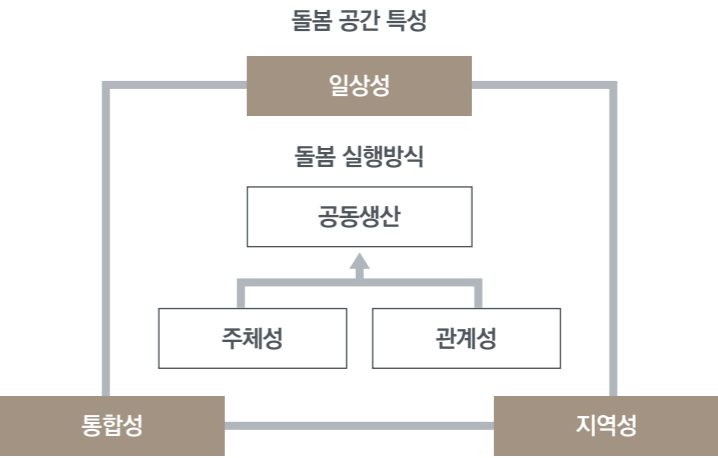
우선 커뮤니티 기반 돌봄 서비스의 실행방식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로 돌봄서비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개별적 주체로서 인간이 지니는 욕구의 가장 정확한 파악은 자신이기 때문에 돌봄 수요에 대한 충족의 내용과 방식의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과거 복지국가 시기의 국가와 사회중심적인 통제를 벗어난 개인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위와 같은 개인 주체성에 기반한 돌봄의 참여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의 관계성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관계성은 개별적 돌봄서비스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상호주관성을 기초로 형성되는 사회적 재화를 의미한다. 돌봄서비스의 형성은 일방적인 정부의 공공재화 제공과 수혜자간 관계가 아니라 특정 공간과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들의 상호주관성에 기반하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진미정, 2015).

세 번째로 돌봄서비스의 공동생산은 주체성과 관계성에 기반해 공급자와 이용자가 함께 돌봄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생산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시민, 봉사조직, 비영리조직 등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들의 관계를 의미하지만주쉬앤무어(Jushi&Moor/2003) 최근에는 영국을 중심으로 공동체주의 운동이나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자조그룹 중심의 공공서비스 참여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동생산은 요구되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관리와 집행, 모니터링과 평가와 같은 전 과정을 시민과 공공영역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학실, 2017). 이러한 공동생산은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에서 기존 공공영역과 함께 시민들과 시민의 결집체인 공동체 및 비영리조직의 공동 투입과 관리가 서비스의 산출수준과 질을 함께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기반 돌봄서비스의 핵심적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커뮤니티 기반 돌봄서비스의 공간방식 측면에서는 다음의 특징들을 거론할 수 있다. 우선 돌봄서비스는 대규모 시설처럼 특별한 공간이나 구역을 의미하기보다 이용자가 생활하는 마을공동체의 일상생활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상성의 특성에 기반한다. 다양한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며 이들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김대건·김동철, 2014). 이와 함께 돌봄의 욕구 자체는 실

| 돌봄서비스의 개념적 특성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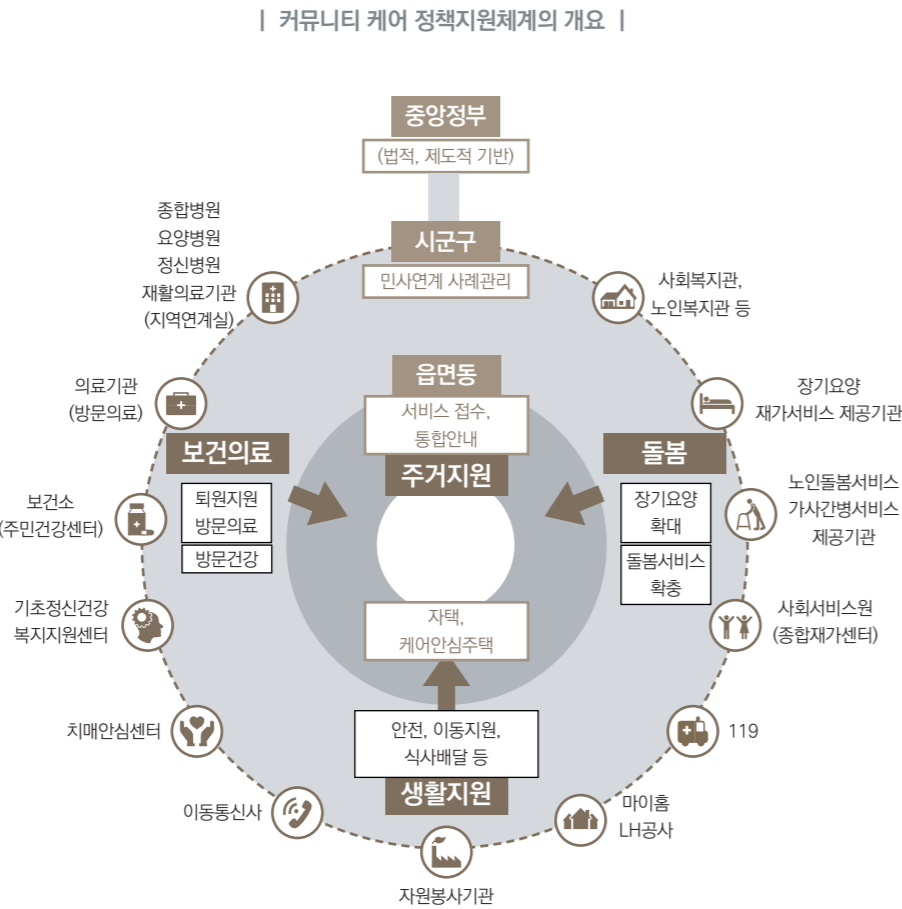
공동체 기반의
공동생산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케어

2018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적 추진을 준비해왔고 의견수렴을 통해 11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 1단계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책적 개념에 대해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화에는 위에서 제기한 요인 중에서 특히 돌봄공간방식인 일상성, 통합성, 지역성의 특성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커뮤니티)와 관계성을 강조하는 주민 욕구중심의 주체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에 부합하는 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 지원정책의 핵심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분절적으로 수행중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탈시설기반 커뮤니티 중심의 재구조화라 볼 수 있다. 특히 1단계로 고령자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다양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주거 지원 인프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3가지 영역에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주거인프라는 ‘케어안심주택’,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주민건강센터’, 재가장기요양서비스는 ‘종합재가센터’와 같은 기반 인프라들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해 서비스 연계의 통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시·군·구 차원에서는 정책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민관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인 ‘지역케어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여 지원체계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이처럼 현재 첫발을 떼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실험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나 개념의 등장이라기보다 기존에 수행되는 서비스의 실행과 운영적 측면의 변화로 평가된다. 공급자 중심의 개별화되어 있는 지원제도들의 연계성에 대한 방법론적 변혁이 핵심이며 그 역할에서 지역사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본질인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케어시스템의 재구조화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핵심적인 주체들이 얼마나 존재하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또한 지역사회(커뮤니티)에 현재 이러한 케어 서비스가 가능한지 역량에 대한 물음이 존재한다. 커뮤니티 케어의 근본적 목적은 탈시설화의 돌봄서비스인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 수행이 불가하면 결국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추진체계 마련과 플랫폼 구축은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체계와 기반 인프라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과 운용의 여부가 결국 커뮤니티 케어 성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임종한(2018)은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큰 자원으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상호신뢰와 협동기반의 공동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커뮤니티 기반의 공급주체 다변화와 지역중심의 관계재를 활용하는 공급방식의 활용으로 실제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구성해야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자료: 황승현(2018)

5

커뮤니티 케어의
일본과 영국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시기이지만 영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시행중에 있다.

우선 일본의 경우 2009년 개호보험 개정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윤영·윤혜영(2018)에 따르면 지역 포괄케어시스템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자치회, 주민조직, NPO등 조직들에게 개호보험 대상자와 교류, 서비스 제공, 상담자를 연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관련 시스템의 핵심 체계는 지역포괄지원센터로 주로 시정촌에서 위탁받은 공익법인에서 운영하며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료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조직이 중심으로 케어 서비스를 수행한다. 지역주민조직은 자치회, 마을만들기조직,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조직을 의미하며 모든 지자체가 공동된 형태보다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자산을 활용하는 마치즈쿠리센터, 안심센터 등 지역활동과 연계되어 복합적인 커뮤니티 케어 활동이 전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를 오래전부터 도입하였는데 시발점은 1968년의 시범보고서(Seebohm Report)로 지역사회에 기초한 대인사회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본격적으로 1990년 커뮤니티 케어의 관련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Social Care Act)이 제정되었다. 기본적 방향은 영국의 지방분권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시스템의 운영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한 복지혼합경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돌봄과 사회서비스에서 재정적 인센티브와 정부지침을 통한 사적영역 및 비영리 민간사회복지영역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한 형태로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김용득, 2005). 따라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일률적 서비스제공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에 기초하여 민영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기업, NGO등 다양한 주체들의 케어 서비스 참여로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일본과 영국 사례의 거시적인 방향은 정부의 일률적 케어서비스 지원방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주민과 자산 및 공동체 조직적 특성에 기반한 커뮤니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활동이 개발·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나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제도는 모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보건·복지 관련 전문성 있는 자원들과 NPO, 공익법인, 공동체기업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근거 마련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공공, 커뮤니티 기반조직, 자원봉사활동, 이용자 등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는 연계 시스템 발달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6

커뮤니티 기반
돌봄서비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충청남도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곧 정부의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이 실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의 계획에는 앞서 설명한 바처럼 커뮤니티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의 통합화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물적 기반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지역 차원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진정한 커뮤니티 기반의 일상성과 통합성의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체가 중심이 되는 공동생산의 전략이 실행되어야 하는 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에서 민간의 지역자원이 발굴되고 활발하게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 활동은 이미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미션을 지향하고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주요 주체로 구성되는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경제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보건복지 기반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도 주요한 활동영역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시장자본주의의 대안 경제로 출발하여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관계재를 기반으로 실천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 기반의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창출의 활동을 수행한다는 미션을 견지하며 연대, 협력, 신뢰와 같은 관계성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서비스의 주요 활동주체에 적합하며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돌봄 관련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원주, 안산의 사례처럼 공동체와 협력하여 보건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하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조합원인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락, 꾸러미 등 다양한 형태로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들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돌봄 및 간병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에서는 대표적으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2009년부터 지역에서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주민이 주체로 조직들 간 네트워크와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유연하고 통합적 서비스의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기반 돌봄서비스 수행에 매우 효과적이다. 대구의 ‘안심마을’이나 원주의 ‘건강반장’과 같은 사례들은 다양한 사회적기업들과 협동조합 조직들의 연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동방식은 돌봄서비스의 특성인 주체성과 관계성에 기반한 공동생산의 지향성에 부합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최종 형태는 보건복지 문제에서 나아가 지역주민활동 기반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 형성이라 볼 수 있다. 돌봄의 형태는 단순한 보건과 복지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형태의 복합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은 자립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기초하여 연대와 협력, 상호신뢰에 기반한 상호 호혜성의 돌봄형태 구축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여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 주목하며 이들과의 협력 모델과 실행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용득(2005), 영국 커뮤니티 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3)권.
2. 김영종(2013),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권.
3. 김윤영·윤희영(2018), 커뮤니티 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60권.
4. 김은정(2015),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서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6(2)권.
5. 김학실(2017), 공동체기반 서비스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6(2)권.
6. 김형용(2012), 지역사회서비스와 마을공동체, 『월간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7. 김희강·강문선(2010), 돌봄의 공공윤리: 예비 키데이 이론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한국정치학회보』, 44(4)권.
8. 이선미(2016), 돌봄의 특성과 돌봄 공공성의 요건, 『사회와이론』, 29권.
9. 주은선(2016),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검토, 『사회보장연구』, 32(3)권.
10. 주현정·김용득(2018), 공공성 담론으로 보는 돌봄서비스,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권.
11. 황승현(2018),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 전략: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제2회 사회공헌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12. Kittay(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김희강·나상원 역, 2016,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13. Hillery(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01

충남의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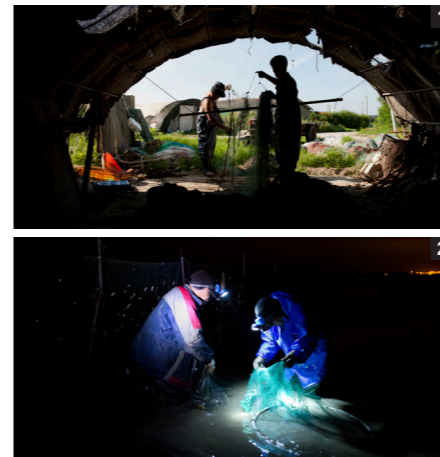
희귀새가 날아드는 철새들의 낙원, 유부도

이재언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유부도 개요

유부도의 지명은 임진왜란 때 부자(父子)가 난리를 피해 섬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살던 섬은 유부도(有父島), 아들이 살던 섬은 유자도(有子島)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고려시대부터 여러 명의 유배객들이 이곳에서 한 많은 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유부도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속한 아주 작은 섬으로 현재 29가구 50명이 살아간다. 해안선 길이는 4km, 넓이 0.79km²이다. 장항읍 선창장에서 약 12km 떨어진 섬으로 배를 타고 30분 정도면 도착하지만 군산 산업단지에서는 어선으로 불과 약 5분이면 닿는 곳으로 정기 여객선이 없다. 섬 동쪽에 1,500m에 이르는 긴 방조제를 쌓아 개발한 염전이 있지만 지금은 휴업 상태이다. 유부도의 자랑은 드넓은 모래밭과 개펄이다. 물이 빠지면 모래밭이 드러나 주변의 작은 섬들과 연결된다. 한 달에 보름 정도 모래와 펄흙이 섞인 단단한 바다 밑이 드러난다. 주민들은 이곳 들판을 농토로 삼고 경운기를 몰고 다니면서 바지락을 채취한다. 이곳 개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은 꼬막과 대합, 죽합이다. 유부도의 특징 중 하나는 충남 서천군에 소속되었지만 생활권은 100% 군산이라는 점이다. 유부도에서 군산까지는 불과 1.5km이기에 작은 배를 가지고 채취한 해산물을 싣고서 군산에 나가 내다 팔고 생필품을 사 온다.

유부도는 드넓은 모래밭과 개펄, 거기서 주민들이 경운기를 타고 나가 꼬막을 잡는 모습, 무엇보다 해마다 유부도엔 세계적인 희귀새 검은머리물떼새가 몰려들어 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반 유부도 마을. 해안선 길이 4km, 넓이 0.77km². 28가구 60여 명의 주민이 사는 금강 하구의 작은 섬이다. 서천군에 속하지만, 전북 군산 쪽에 더 가깝다. 장항 항에서 배(선외기)로 20분 거리, 군산에선 5분 거리다. '외딴섬'으로 불리는 까닭은 물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에 가게도 없고 물을 오가는 정기 배편도 없다. 주민들은 '선외기'라 부르는 작은 동력선을 타고 육지를 오간다. 먹을 물은 주로 물에서 배로 실어



1_ 그물 손질하기
2_ 야간에 고기잡기

다 먹고, 세탁용이나 허드렛물은 빗물을 받아뒀다가 쓴다. 유부도는 도시처럼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분수 있고, 전깃불도 밝혀놨지만 얼마 전까지 자가발전을 다음 때문에 밤 11시가 되면 전기가 중단되었다. 그만큼 하루 일과 또한 일찍 끝이 난다. 발전기 한대를 돌려, 하루 10시간씩만 가정에 공급했다. 최근에야 군청 지원으로, 발전기를 한 대 더 들여놓고 24시간 전깃불을 밝힐 수 있게 됐다. 전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지만 이웃과 서로 도우며 정겹게 살아가는 유부도 주민들 그래서 외로운 섬, 유부도의 인심은 늘 따뜻하기만 하다.

유부도는 유배의 섬이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수많은 유배객들이 이곳에서 한 많은 생을 마쳤다고 전해진다. 유부도 근처에는 유자도란 작은 섬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피난 와 살기 시작하면서 유부도·유자도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유부도의 갯벌과 가치

유부도가 보여주는 풍경의 으뜸은 드넓은 모래밭과 개펄이다. 물이 빠지면 모래밭이 드러나 주변의 작은 섬들과 연결된다. 한 달에 보름 정도 모래와 펄흙이 섞인 단단한 바다 밑이 드러난다. 주민들은 이 넓은 들판을 경운기로 오가며 해산물을 채취한다. 개펄에서 나는 대표적인 해산물은 꼬막과 대합, 죽합이다. 지금 유부도와 이어진 북쪽 돌섬(돌섬) 앞 개펄에선 주민

유부도 전경



들의 꼬막 채취가 한창이다. 아득한 벌판을 경운기로 10여 분씩 달려, 개펄에 들어가 꼬막을 채취하는 것이다.

유부도와 모래 개펄로 이어진 돌섬과 막섬(털섬) 등은 자그마한 바위섬이지만, 거기에 올라 내려다보는 주변 풍경은 벌판에 솟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탁 트였다. 해산물 채취 구역 표시로 박아놓은 나무 기둥들이 줄줄이 이어져 바닷물에 달고, 개펄 위로 굽이치는 크고 작은 물골에선 물새들이 먹이를 찾는다. 돌섬 위에서 바라보는, 군산항 쪽으로 넘어가는 해넘이는 화려하면서도 쓸쓸하다. 개펄의 자작자작한 물 위로 황금빛 불기둥이 세워지고 마침내 붉디붉은 노을의 지붕이 완성되면, 철새들이 떼 지어 날아와 밤을 지낼 곳을 찾는다. 노을이 쓰러진 뒤에도 철새들은 여운처럼 길고 긴 행렬을 이루며 돌아와 섬을 수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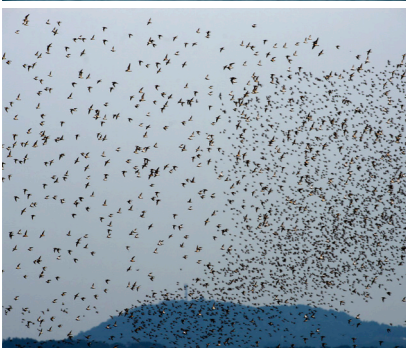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유부도 일대의 갯벌 16.5km²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은 ‘검은머리물떼새’로 유명한 유부도 인근 갯벌(3km²)과 평소 갯벌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리, 장포리에 걸친 펄과 모래가 혼합된 갯벌(13.5km²) 등이다. 특히 금강하구에 위치한 유부도 갯벌은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의 30% 이상이 월동하는 중요한 서식·산란지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조류학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 서천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금껏 갯벌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하고 매립만을 추진해 오던 생각들이 변화되어 갯벌을 매립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라 갯벌 보전으로 인해 더욱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



3_ 유부도 원주민 어업
4_ 채취한 조개를 운반하는 주민

철새들의 군무



철새들의 낙원 유부도

섬의 유일한 학교인 송림초등학교 유부도 분교는 네 명의 어린이와 한 명의 선생님이 지킨다. 학생 수가 적으니 늘 가족 같은 분위기다. 놀이동산도 없고 가게도 없지만 유부도 아이들은 언제나 자연과 벗 삼아 신나게 놀면서 공부를 한다. 운동장에 골대가 없어서 신발을 놓고 축구를 해도 즐겁기만 한 유부도 아이들이다.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도시 아이들과는 공부하는 좀 뒤 떨어져도 자연을 벗 삼아 살기에 감정이 풍부하고 인성은 그만이다. 섬의 남쪽 끝, 시누대숲 우거진 언덕엔 돌무더기 쌓인 옛 성황당 터가 있다. 최근 계단을 만들고 철새 관찰소도 마련해놓았다. 교실에 공부하다가 문을 열고 나가면 새들의 군무와 마주한다, 학교 위로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가창오리 떼들, 서해바다가 붉게 물들어 가는데 낙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하지만 그 배경 속에 펼쳐지는 수만 마리 철새들의 행진을 보면 누구든지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누대길 옆으로 소나무 숲길이 이어진다. 섬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속에 비친 도시인의 모습, 국토를 제멋대로 파내고, 허물어 버리곤 하는 관계당국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질 때가 많다. 다소 불편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인심을 나누며 탈 없이 살아가고픈 것이 섬사람들의 바람이다. 그들은 일없이 방조제를 만들어서 물길을 바뀔 버리고,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곤 하는 물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유부도는 충남 서천에 속한 섬이지만 지리상으로 군산과 가깝기 때문에 생활권 또한 군산에 속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유부도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여청도, 연도, 개야도, 죽도 섬들은 행정상으로 전북 군산에 속하는데, 한참 남쪽에 있는 유부도는 충남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충남과 분쟁을 이루고 있는 섬들은 일제 암흑기인 1914년, 일본인들이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남과 전북이 티격태격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부도 주민들은 그러한 싸움에 대해 그리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단 말인가. 그저 탈 없이 살아갈 수만 있으면 그만인 것이다.

유부도는 유난히도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다.

이분들 바다에 나오면 다섯 여섯 시간은 기본으로 허리를 굽혀가면서 조개를 캔다. 갯벌에는 동네 주민들보다 철새들이 더 많다. 추운 겨울만 되면 특이한 철새들이 유부도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갯벌이 메워지고 장항 군산 간의 공업단지가 조성되면 이곳을 찾던 철새들도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철새들처럼 마을 분들 역시 정든 유부도를 떠나 다른 곳에서 동지를 틀어야 될지도 모른다. 송림초등학교 유부도 분교, 이 작은 학교에는 학생 세명과 선생님 두 분이 있다.

학생수가 적으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다. 유부도 분교의 전교생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6학년 보람이, 씩씩한 5학년 정진이는 경찰관이 꿈이다. 그리고 웅변 연습이 한창인 막내 1학년 명기도 있다. 햄버거 가게, 놀이동산도 없지만 유부도 아이들은 언제나 신나게 생활한다.

골대가 없어서 호박을 놓고 축구를 해도 즐겁기만 한 유부도 아이들...

유부도에서는 빗물을 모아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식수만큼은 배를 타고 나가 장항에서 받아 온다. 섬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한다.

도시처럼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전깃불도 밝혀놨지만 유부도는 자가발전을 하기 때문에 밤 11시가 되면 전기가 중단된다. 그만큼 하루 일과 또한 일찍 끝이 난다. 전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장항에서 수도물을 받아 운반해 오는 것이 힘들지만 사는 게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이웃과 서로 도우며 정겹게 살아가는 유부도 주민들...

그래서 외로운 섬, 유부도의 겨울은 올해도 따뜻하기만 하다.

여행정보

유부도는 정기선이 없다.
철새관찰 혹은 일반관광목적 입도 시,
유부도 동진호 선장에게 전화를 하면 된다.

유부도 동진호 김선장 |

01

충남시장플러스

3·1운동 100주년, 역사적 의미와 함께하는 예산 덕산 시장

이유나 | 충남연구원 홍보담당

전통시장의 추억을 만나다



천년고찰 수덕사와 가야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고장, 가야산만 넘으면 해미읍성과 서산이 바로 연결되어 조선 초부터 보부상이 발달되어 왔던 곳. 이제는 골목 하나 남짓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서 소소한 숨결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예산 덕산시장에 다녀왔다.

매월 4일, 9일이면 덕산 장이 선다.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물건들이 장을 가득 채운다. 골목을 가득 채운 나물바구니와 과일바구니를 지나 시장 중앙으로 들어가니 풀빵을 굽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흔히 보는 봉어빵이나 호떡을 파는 매대가 아니다. 자리에 앉아 풀빵기계를 하나 앞에 놓고 구워지는 풀빵들을 커다란 소쿠리에 퍽퍽 던져 넣으신다. 할머니 옆에 앉아 풀빵을 하나 집어 들었다. 몇 개에 얼마.. 라는 가격표도, 몇 개 먹으면 얼마야, 라는 설명도 없다. 그냥 먹어봐~ 가 전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풀빵은 3개에 천 원. 그런데 풀빵을 사러 오는 이에게 대뜸 먹어봐~ 하고 한 개를 입에 넣어주시니, 실은 4개에 천 원이라 할 수 있겠다. 풀빵 바구니 옆에 목욕탕 의자가 놓여있다. 그 의자에 앉아 풀빵을 먹으며, 할머니 친구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필자가 시장을 방문했을 때가 설을 앞두고 있던 터라 얼마 있으면 손주가 오는데, 손주 세뱃돈을 얼마를 주느냐,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풀빵 뒤쪽에 오랜만에 만나는 뽕튀기 기계가 있다. 시장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뽕튀기 기계지만 시장에 가는 일이 쉽지 않으니 뽕튀기 기계는 볼 때마다 신기하다.

뽕튀기 기계를 지나면 돼지껍데기를 파는 포차가 나온다. 점심시간이 조금 안된 시간. 벌써 거나하게 막걸리를 걸치신 어르신들이 보인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니 “뭘 찍는 거여~? 나 좀 찍어줘~” 라시며 방긋 웃으신다. “이거 책에 들어갈 사진인데~ 얼굴 나와도 돼요?”하니 “그럼~ 얼굴이 나오야지~ 이거 책 나오면 일루 갖구 와~”하시며 껄껄 웃으신다.





시장 중심골목을 왼쪽에 끼고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덕산 양조장이 나온다. 간간 하신 주인장이 아들, 딸과 함께 양조장을 운영 중이신데, 맞은편 건물에서 동동주와 막걸리를 구매할 수 있다. 필자의 외가에서 양조장을 운영 중이신데, 어릴 적 놀러갔던 기억에 양조장에서 한참을 발을 떼지 못하고 구경을 하였다.

시장을 방문하기 전 덕산상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 빵이며, 차가 맛있다고 하여 기대를 하였는데, 방문한 날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중심 골목 끝까지 가면 덕산초등학교가 나온다. 필자도 학교가 끝나면 부러 시장에 들러 떡볶이랑 튀김만두를 사 먹곤 했었다. 덕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아마 어른이 되면 그런 시장에 대한 추억이 남게 되지 않을까..

포차에 앉아계시던 어르신께 덕산시장 근처의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여쭙었더니, 두 곳을 얘기하셨다. 그 하나가 남연군묘(고종의 조부墓), 또 하나가 총의사였다.

남연군묘는 가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덕산시장에서 차를 타고 5분여를 달리면 남연군묘가 나온다.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오는 자리라는 지관의 말을 듣고 흥선군이 가야산에 있던 가야사를 폐지하고 아버지의 묘를 옮겼다고 한다.

남연군묘 가는 길에 있는 옥계저수지를 둘러 가야9곡 둘레길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 •

덕산, 하면 온천 혹은 수덕사를 떠올릴 것이다. 허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예산 덕산! 하면 충의사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한다.

충의사는 매헌 윤봉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다. 1968년 창건하여 1972년 사적 제229호로 지정받았으며 윤봉길의 유품 28종 56점이 보물 제568호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1984년 충의관 및 사적비, 2000년 윤봉길의사 어록탑, 2001년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충의사는 윤봉길의 영정을 봉안한 본전, 출생 이후 4세 때까지 살던 생가(광현당),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 23세 때까지 살던 성장가(저한당)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윤봉길의사기념관에는 유물 56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윤봉길 의사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해마다 4월 27~29일에는 윤봉길의 애국과 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두 아들을 뒤로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윤의사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전국에 수많은 시장이 있다.

또 시장마다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2019년, 필자는 그 수많은 시장 중 덕산시장을 꼭 한번 방문해보길 바란다.

시장의 훈훈한 입김과 정겨운 웃음은 당연하다. 따뜻한 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두말할 필요 없는 수덕사도, 피로한 몸을 녹일 온천도 준비되어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3·1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윤봉길 의사의 그 나라를 위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01

열린마당1

우리 모두의 3·1절 100주년을 위하여

박경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평양에서 태어난 이화림 지사



젊은 시절의 이화림 지사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이화림 지사는 1905년 1월 6일 평양시 경창리(景昌里)에서 태어났다. 위로 오빠가 둘, 언니가 한 명이 있었다. 어릴 적 그녀의 이름은 춘실(春實)이었다. 큰 오빠 춘성(春成)은 숭실중학을 다녔지만 2학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퇴했다. 둘째 오빠 춘식(春植)은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다. 언니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15세 되는 해에 시집을 갔다. 아버지 이지봉(李芝奉)은 고정된 일자리가 없어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김인봉(金仁奉)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미국인이 설립한 교회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이화림 지사에게 “여자가 무슨 공부냐? 기다렸다가 시집이나 가면 될 것이지”라고 말해 이화림 지사는 크게 낙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이화림 지사를 미국전도사가 설립한 숭현(崇賢)소학에 입학시켰다. 이화림 지사가 이 학교에 가 기뻐던 것은 이 학교는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른 학교는 강제로 일본어를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어를 “왜화(倭話)”라고 하며 비하했다.

3·1만세운동에 참가

3·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당시 이화림 지사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전체 선생님과 학생을 데리고 평양의 송덕(崇德)학교 운동장에 찾아갔다. 여기에는 평양의 각급 소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도교 등 사회각계단체가 모두 참가했다. 운동장은 사전 전에 나눠준 태극기로 바다를 이뤘다. 그 후 3·1만세운동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전국 200여 군에서 2000여 차례 시위할

동에 각 계층의 200만 여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제는 3·1만세운동을 야만적으로 진압했다. 3·1만세운동 이후 3개월 동안 무려 7500명을 살해했고 1만 6000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760곳의 사립학교 및 민간주택을 파괴하거나 훼손했다. 이 때문에 많은 애국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가 투쟁을 계속했다. 이화림 지사의 가족은 평양에서 계속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어머니는 비밀리에 군자금을 모으는 일을 했다. 비밀작업은 여자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오빠들은 교회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 그러자 일본경찰들이 검문, 검속을 강화하며 압박해 들어왔다. 1920년 무렵 일본경찰들은 거의 매일같이 이화림 지사의 두 오빠들을 잡으러 찾아왔다. 두 오빠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어 결국 중국으로 가 독립군에 참가했다. 이화림 지사는 국내에 남아 송의여자중학 유아반에 입학해 유치원 교사를 위한 공부를 하는 한편 독립운동 활동에도 가담했다. 졸업 후에는 군산시와 청진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독립활동에 참가했다. 조선공산당에도 가입했으나 조직의 분열과 일제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자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오빠들이 있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상하이로 가서 김구의 한인애국단에 가입

1930년 9월 이화림 지사는 험난한 길을 헤치고 상하이에 가서 김두봉 선생을 찾았다. 이화림 지사는 김두봉 선생에게 자신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상하이로 왔고 중국에서도 계속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자 김두봉 선생은 김구 선생을 소개했다. 김구 선생을 찾아가 이화림 지사는 자신이 독립운동을 위해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인애국단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구 선생은 이화림 지사가 여성이고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처음엔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화림 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김구 선생을 찾아가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결국 김구 선생은 이화림 지사의 진심에 감동해 그녀를 받아들였다. 이후 역사의 중요 순간에 이화림 지사가 있었다. 이화림 지사는 이봉창 의사가 일본천황 폭살을 위해 일본으로 떠날 때 폭탄을 넣는 숙고쟁이를 만들어 주었고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 당시에는 윤봉길 의사와 부부로 위장해 사전에 폭탄투척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화림 지사는 폭탄투척당일에 윤봉길 의사와 함께 홍커우공원에서 열린 일제의 천장절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김구 선생이 만류해 들어가지는 못했다. 김구 선생은 이화림 지사가 일본어에 서툴러 발각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폭탄투척으로 인해 윤봉길 의사와 이화림 지사 둘 다 잃을 수 없다는 판단이기도 했다.



이화림 지사는 이봉창 의사의 도쿄 폭탄투척사건,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에 조력했다.

출처: <https://blog.naver.com/nonepapa/221069897383>

의술을 배워 독립투사들을 돌봐

상하이 홍커우공원 폭탄투척사건 이후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이화림 지사는 조선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 있는 광둥성 광저우로 갔다. 그곳에서 이화림 지사는 중산대학 의과대학에서 견습간호사로 일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했다. 그 사이 김상국이라는 유학생을 만나 결혼해 아이도 한 명 갖게 됐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뿐이었다. 자신이 중국에 온 것은 안락한 가정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과의 아픔을 뒤로하고 의열단원이었던 윤세주 열사를 따라 난징으로 갔다. 이후 윤세주 열사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군)에 참여하며 난징(南京), 충칭(重慶), 꾸이린(桂林), 타이항산(太行山)지구, 옌안(延安) 등 중국 전역을 돌며 독립투사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봤다.

옌안에서는 무정 장군의 권유로 중국외과대학에 편입해 의학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 드디어 조국의 해방을 맞이했지만 이화림 지사는 하던 공부를 마저 해야 해서 옌안에 남아 학업에 전념했다. 의대를 졸업 후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옌벤의학원 등에서 근무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봤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나자 중국 정부는 너희 나라에서 전쟁이 났으니 가서 사람을 돌보라고 해서 북한군 의료지원단에 파견되어 위생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들을 치료했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본인도 결국 미군의 폭격을 당해 부상을 입고 중국 선양으로 들어와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이 휴전되자 다시는 조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게 되었다.

평생 조국의 안녕과 평화 통일 기원



노년기의 이화림 지사

그 후 이화림 지사는 중국에 남아 중국 정부기관과 연변조선족 자치구에서 활동도 하며 조선인의 자립과 자치를 위해 일했다. 조선동포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그는 연변자치주 당대표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갑작스레 닥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년간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문혁이 끝나고 복권은 됐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갔습니다. 중국정부는 이화림 지사를 환경이 좋은 대련으로 보내 그곳에서 요양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했다. 이화림 지사는 그곳에서 조선인 사회의 원로로 여러 역할을 했으며 평생 모은 돈을 조선인, 특히 미래세대인 아동들을 위해 기부했다. 남한과 북한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다렌의 해안가에서 늘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희망했다. 그러다 1999년 2월 10일, 한 편의 대하드라마 같은 이화림 지사의 삶은 막을 내렸다.

다행히도 이화림 지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평생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정도征途: 머나먼 여정〉을 남겼다. 중국역사기록기관의 작가가 중국어로 기록한 이 회고록을 다행히 필자가 어렵게 찾아내 번역한 후 2014년 〈이화림 회고록〉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타이항산 항일근거지 반소탕작전 중 부상을 입은 조선의용대 대원을 치료하는 이화림 지사

독립운동 서훈을 받지 못한 이화림 지사

평생 독립운동을 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화림 지사는 아직 독립운동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으로 참전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화림 지사가 전투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의사로서 조국 병사의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후손들은 아직도 이념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이념이 필요할까? 독립군을 토벌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많은 친일파들은 해방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 다시 정부 편에 들어서고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에 반해 이화림 지사는 평생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고도 북한과 관련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에 이 같은 결과가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남녀, 좌우 구분을 넘어 모두의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야

비단 이화림 지사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수히 많은 독립지사들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관심과 차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남성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독립운동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독립운동의 역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는 유관순 열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암살〉의 안옥윤과 〈밀정〉의 연계순처럼 국내외에서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을 펼친 수많은 여성독립투사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유관순 열사 외에 뚜렷이 기억하는 여성독립운동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역대 독립운동 서훈자는 15,180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4,823명, 여성은 357명으로 여성독립운동가 비율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보훈처 2018년 11월 17일 기준) 여성들은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많은 분들은 어머니와 아내로써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집안을 비울 때 모진 핍박을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독립운동의 서훈이 사료에 의한 증거 중심이다 보니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기록되지 않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념에 의한 독립운동 서훈 차별도 심각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이념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일제와 맞섰는데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해 한반도가 둘로 나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념은 하나의 족쇄이자 저주의 이름이 되어 버렸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특히 많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해 조국이 좌우로 나뉘고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그들의 역사는 묻혀버렸다. 김구 선생보다 일제의 현상금이 많았던 불세출의 영웅 약산 김원봉도 해방 정국에서 친일파의 괴롭힘에 못 이겨 북한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역사에서는 금기의 이름이 되어 버렸고 그의 가족은 멸문지화에 가까운 참화를 겪었다. 김원봉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이후 좌우 분열 속에서 화를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분단국가 현실에서 어찌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들이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워지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는 다시 정의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화림 지사처럼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고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묻혀버린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찾아내고 그들을 기억하고 선양해야 한다.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그냥 맞이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남북 교류와 화해를 통해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02

열린마당2

천안 · 아산 지역 도래 월동 독수리에 관한 고찰

김상섭 | 한국조류보호협회 아산시지회장



1. 들어가기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초겨울이면 몽고에서 대략 3,400km의 먼 거리를 날아와서 커다란 날개를 펴고 유유히 푸른 하늘을 날아 멋있는 자태와 위용을 뽐내며 겨울을 나고 이듬해 3월 중순이면 다시 몽고로 되돌아가는 지구에서 가장 큰 야생조류인 독수리들이 있다. 그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은 자연스레 권위를 상징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신앙과 신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왔다. 그러나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이들은 사냥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연에 버려진 동물의 사체나 포식자가 먹다 남긴 먹이를 먹어가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청소동물이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략 250무리 정도였던 월동개체군이 2005년부터는 약 2,500무리의 개체군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무리는 주로 1~2년생이 대부분인데 이는 몽골 등의 서식지 환경변화와 파괴로 인한 먹잇감의 감소와 겨울철의 극심한 추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겨울철 먹이주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 등 중부지방에서 주로 월동하던 독수리들이 2010년 이후에는 먹이주기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경남 고성과 김해 등지에서 도래하는 개체의

2. 독수리의 특징

분류학적 특징

독수리는 매목 수리과에 속하며 세계적으로 매목은 5개의 과(뱀잡이수리과 콘도르과 수리과 매과 물수리과)로 나누는데 낮에 활동하는 주행성 맹금류인 수리과에 포함된다.

특히 수리과는 다양한 분류 군으로 구성된 무리로 전체 맹금류의 대부분인 64속 22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독수리는 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신대륙독수리류(New World Vulture)와 구분되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구대륙독수리류(Old World Vulture)의 분류 군에 속해있다 영어로는 ‘vulture’와 ‘eagle’로 나누는데 ‘eagle’은 혼자서 사냥할 수 있는 흰꼬리수리 흰족자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등의 맹금류를 말하며 사냥을 하지 못하고 주로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청소동물인 수염수리 히말라안그리폰독수리 독수리 등이 ‘vulture’에 속한다.



학명은 ‘Aegyptius monachus’로 속명 ‘Aegyptius’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대머리독수리를 뜻하며 종소명 ‘monachus’는 수도승을 뜻하는 ‘monk’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는 머리가 벗겨지고 목 주위의 깃털이 난 모습이 후드를 뒤집어쓴 수도승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형태적 특징

독수리는 구대륙독수리 중에서 가장 큰 종으로 편 날개길이는 250~295cm에 체장은 90~120cm이며 체중은 7~14kg이다.

머리가 벗겨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크고 넓은 날개와 썩기 모양의 꼬리 어두운 갈색의 깃털을 갖고 있으며 사체를 뜯어먹기 위해 부리가 매우 발달해 있다질은 갈색 깃털은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이며 나이가 들수록 점차 옅은 갈색으로 변한다.

머리와 목 부분에 깃털이 없는데 이는 동물사체의 내장을 먹을 때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동물의 특징이란 학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생태적 특징

전 세계 독수리류 23종 중 상당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환경위생 측면에서 인류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동물인 이들 개체군의 감소는 인간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제243-1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자연보존연맹(IUCM)에서도 적색자료 목록에 위기근접종(NT)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제보호조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으로 생활하며 번식지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등지를 틀어 번식하는데 암수가 부화한 새끼를 함께 기르며 번식기는 3~5월로 드물게는 8~9월까지도 번식하는 개체가 관찰된다고 한다. 성체가 되기까지는 약 6년 걸리며 수명은 30년 이상이지만 보통은 20년가량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3. 천안·아산 지역의 월동지 특성과 위협요인

분포 변화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주변과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에는 양돈 양계 농가와 이곳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은데 겨울철 농한기에 살포하는 계분 속에 섞여있는 닭이나 돼지 등의 사체를 먹기 위해서 도래한다. 세교리의 독수리 무리는 텃밭 넘버 24와 42 등의 관찰사례로 보아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 예산군 경기도 평택시를 세력권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당진에서도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먹이부족이 이동의 주원인으로 보인다.

이동의 주원인으로는 먹이의 유무로 세교리에서는 계분의 살포가 가장 활발한 1월 중순에 최대 개체수를 보인다 이후에는 7~15 정도의 소규모 무리로 나뉘어 충남 일원의 양계농가나 양돈 축사 주변에서 취식하며 지내다 3월 중순에 무리를 지어 되돌아간다.

위협요인

그동안 구조된 독수리의 사례로 보아 주원인으로는 먹이 부족으로 인한 탈진과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으로 죽어서 버려진 오리, 고라니 등의 사체를 먹어서 발생한 2차 농약 중독 및 유해조수구제시 유기된 사체에 의한 납중독이 있으며 그 외에 전선과 차량 충돌에 의한 부상과 하천변에 버려진 낚싯줄에 의한 다리 절단 등의 훼손 위험이 있다. 또한 민간 단체에서 주고 있는 먹이는 주로 도축장에서 나온 축산 부산물과 폐사체로 잠재적 질병 의 발생과 감염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는 먹이주기로 형성된 집단개체군의 전염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4. 보전체계수립의 필요성

먹이터 확보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삼태리, 용정리와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휴대리, 갈매리 일대는시 상습 발생지인 용정리 대규모 양계단지를 이웃하고 있어 감염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Bird strike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먹이터의 이전을 통한 월동지의 확보가 절실한 상태이다. 실제로 구조 치료 후 방사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과 곧바로 충돌한 사례도 있다. 특히 시 발병으로 인한 혐오동물이란 인식 확산과 악취 발생, 농가 피해 등의 민원 제기로 이전의 필요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먹이 확보와 제공의 조절

앞서 기술 한 바 자원봉사에 의존한 축산 부산물과 폐사체의 먹이 제공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의 지출을 발생시키고 있어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Road kill 당한 고라니 등의 사체와 유해조수구제사업으로 포획된 사체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먹이 제공 시 납 중독 등 2차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X-Ray 촬영 확인과 질병감염 등 사전 점검 절차는 필수적으로 실행한 후 제공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먹이 제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먹이를 주는 주민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인간과 독수리의 다양한 공생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순환과 종다양성 보존도 이루어질 수 있다.

먹이터의 조건으로는 무엇보다도 독수리들이 이전에 자주 다녀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익숙한 곳으로 인간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되 먹이가 잘 보이며 비행할 때 전선이나 차량 충돌의 위험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개체군의 조절관리

경남 고성과 김해의 사례뿐만 아니라 아산 세교리에서의 먹이주기 후 발생한 독수리군집 현상은 질병의 발생과 그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급여빈도와 급여량의 조절로 안정적인 개체군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먹이 주는 장소를 동일한 시기에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몽골 번식지에서의 먹이 획득시 이동하는 거리가 대략 40km 이상 임을 감안할 때 월동 집단 간의 거리는 최소한 40km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경상남도 고성, 김해, 창녕 등지에서의 먹이주기는 적절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어서 중부지역에서의 먹이주기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파주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지자체장의 관심과 주민들의 민원이 독수리들의 안정적인 월동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 먹이 급여량을 1개체당 1일 0.5kg으로 산정하고 주3회 고라니 사체 6구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세교리 지역은 약 30~50무리가 안정적인 개체군일 것으로추정된다.

시민 주체의 보존네트워크의 확대와 협조 체계 확립

특정 지역에 독수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개체군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먹이주기 시기 조절과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먹이 경쟁에서 도태된 개체의 관리와 독극물 중독과 조난 등의 위험에 노출된 개체들의 효율적인 구조와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독수리들의 거시적인 관리 즉 월동지와 몽골의 번식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각 시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천연기념물 관련 지역단체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봉사단체들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위한 보존 네트워크 구성의 사회적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는 민간 주도의 ‘Korea독수리시민 모니터링 모임’이 독수리가 월동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뜻있는 단체와 사람들에 의해 결성되어 전국적으로 도래하는 독수리들의 월동개체수를 확인하고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먹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남의 고성, 김해, 화포천, 창녕, 우포 등 일부지역에서 생태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더 늦기 전에 전 세계에 약 20,000개체 정도만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수리들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새들이 살 수 없으면 우리들도 살 수 없으므로.

03

열린마당3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화와 권리찾기 지원의 체계화를 위하여

: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찾기 지원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용기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권리의 확보, 확대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침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개편으로 인해 저임금 청소년 노동력에 대한 시장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바 등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81.5%에 이르며, 그중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본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2016.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우리는 지난 2014년부터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충남도교육청과 협조 하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사실은 노동인권은 교육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교육-상담-권리찾기 지원”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당시 충남도의회에 전달되면서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2.30.)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충남도교육청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2017년 6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운영 6개월 만인 2017년 12월 31일 위탁이 중단되었다. 교육-상담-권리찾기 지원의 일원화된 지원체계로서의 전담기구는 이렇게 시작과 함께 종료되었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1, 2학년도 일부 시행)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다소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사고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대상과 시간 모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인권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현재의 교육은 대상과 시간에서 모두 확대되어야 함 또한 분명하지만, 노동인권의 시각에서 본다면, 교육만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의식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권리 또는 권리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권리의 보장과 확대로 실질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권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실현 사이에는 사회

2.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찾기 지원 연구모임”이 추구했던 과제

적 저항이라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1의 저항은 바로 사업주로부터 온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호의적인 사업주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권리의 저임금 노동력일 때만 청소년 노동은 가치가 있을 뿐이다.

제2의 저항은 노동부로부터 온다. 아니,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노동부가 그럴 리가...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으나 청소년과 청소년노동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청소년들은 오히려 2차, 3차의 인권침해를 당하기 일쑤다. 사업주와 노동부의 저항에 직면하는 순간 교육을 통해 획득한 청소년들의 권리 인식은 위축되고 심지어 퇴행하게 되는 결과까지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권리에 관대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자 결과로 청소년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사회적 지지, 지원 또한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기의 경험 이 평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 피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으며,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에 대한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지지, 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은 교육만으로는 청소년노동 인권을 실질화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시기 민과 관 공동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던 교육-상담-권리찾기 지원의 원스톱 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활동이 중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영역 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적극적 고민의 결과로 연구모임을 제안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한 상담과 권리 찾기 지원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권리 찾기가 이른바 때인 돈 대신 받아주는 대행업무로 전락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의식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 내는 시도로 연구모임은 자기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권리찾기 지원모임은 청소년노동인권 권리침해의 실제 사례의 공유와 현재 충남도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 및 권리 찾기 지원 사업의 모범 사례의 수집, 분석을 통해 아래의 내용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 침해를 인식한 청소년들이 권리 찾기에 나서는 실제적인 첫 출발은 “상담”이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어떠한 시각과 가치에 입각하여 상담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방향이 대부분 정해진다. 따라서 내담한 청소년에게 상담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하고, 권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의 시각과 자세, 그리고 견지해야 할 가치를 규명한다.

나. 권리찾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저항-사업주, 학교, 친권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한다.


다.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진정이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진정서 작성법, 근로감독관 조사 시 대응법, 그리고 필요한 여러 법적절차들을 구체화한다.

을 통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낸다.

동시에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찾기의 지지, 지원자이며, 중간 매개자인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와 청소년 또래 지킴이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및 활동내용

월례모임(총 8회)	
	실제 상담사례 분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논의 및 쟁점 사항 분석
강사초청 특강(총 5회)	
	실질적인 상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실무적 교양의 습득 - 상담의 기법 - 자주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 - 진정절차 이해 및 문제점 찾기
현장답사(3건)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비정규직 지원센터,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원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현황 및 사례 분석
청소년 또래 지킴이 모임 및 교육(5건)	
	-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지킴이 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의 진행 - 청소년노동인권 또래지킴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주제 -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이해 - 노동인권 활동가로 산다는 것 - 노동인권의 역사와 현장을 찾아서(노동인권 도깨비 기행) - 청소년노동인권 캠프 개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교실(3회)	
	학교, 거리, 시내 등 찾아가는 상담활동 진행 무료상담 현수막 게시

기타	
	기자회견 1회, 면담 4회(지청장 면담 1회 포함) - 청소년 진정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무성의 편파 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

4. 연구모임의 결과

연구모임 진행 동안 우리는 총 8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중 사업주에게 의견서를 작성 발송한 사례가 12건,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사례가 12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리침해를 당한 청소년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강화에도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권리찾기 지원에 함께 했던 청소년노동인권 지킴이들의 역량 강화에도 역시 큰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상담에서부터 권리찾기 지원, 노동부 진정까지의 전 과정을 매뉴얼 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5. 향후과제

우리는 연구모임의 성과를 계승하여 청소년 권리찾기 지원을 위한 상담사례집과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2017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된 교육-상담-권리찾기의 원스톱 지원체계로서의 청소년노동인권 전담기구의 재설치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민간의 열정과 경험, 관의 행정력이 합리적으로 결합된다면 충남지역에서의 청소년노동인권은 급속하게 실질화될 것이며, 인권충남을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01

해외리포트

도심 속 폐교가 창업보육시설로 부활하다

: 일본 후쿠오카시 및 도쿄도 오타구 사례

이민정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이후, 농촌을 중심으로 폐교발생이 문제시되어 왔지만, 2010년대부터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고령화, 원도심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도심 속 폐교가 등장하게 되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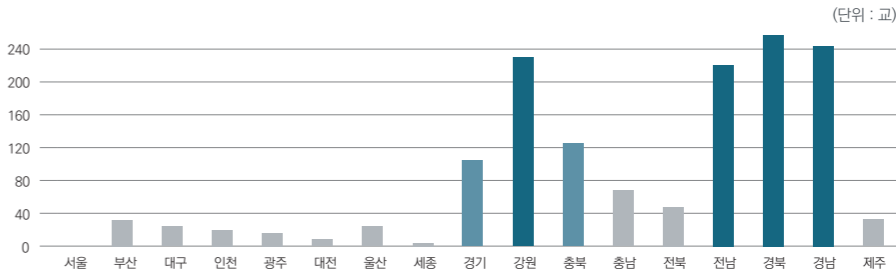
2018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3,752개, 충남에는 261개의 폐교가 있다. 충남의 폐교 현황을 보면 198개는 매각, 63개는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폐교 중 절반인 31개는 대부(15개)와 자체 활용(16개)으로 활용 중이나, 32개는 미활용인 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림 1, 시군별 보유폐교 현황은 표 참조)

1) 중도일보(2014.11.14.) “천안 초등학교 10곳 중 1곳 폐교수준”

| 훗포초등학교 활용 오타구 산학연계지원시설 |



| 그림 1 | 시도별 보유폐교 현황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정보

| 표 1 | 충남 시군별 보유폐교(2018.3.1. 기준)

공주시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7	5	-	10	3	4	6	4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계
3	1	4	2	2	2	10	63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폐교재산현황

우리나라보다 사회현상이 앞서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대도시 도심부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어,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학교시설 활용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학교시설에 도입된 기능은 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지역문화 창달의 거점화를 목적으로, 의료·복지시설, 지역커뮤니티시설, 예술센터, 학교(도교의 경우는 외국인학교, 대학 등)가 많다.

일본의 폐교는 활용과 운영 측면에서 관(官)주도와 민간주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활용방법은 지자체·주민·민간기업·NPO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운영방법은 시설특성에 맞게 복지법인·NPO법인·제3섹터 등을 운영주체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국외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했던 도쿄도와 후쿠오카시에서는 일반적인 폐교 활용(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와는 다르게 창업보육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구(區) 협회운영의 폐교활용 창업보육센터와 시(市) 운영의 폐교 활용 창업보육시설을 소개하도록 한다.

2. 도쿄도 오타구 산학연계지원시설

오타구(大田區)는 도쿄도 23구의 남단에 위치하고 게이힌(京浜)공업지대가 위치해 있는 인구 약 72만 명의 자치구이다. 특히, 종업원 수 10명 정도의 소규모업체인 “마치코바(町工場)”가 밀집한, 우리나라로 치면 “뿌리산업 클러스터”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렇듯 도심에 위치한 훗포초등학교(北蒲小学校)도 2005년 학생 감소로 폐교되자, 오타구에서는 예로부터 “마치코바”로 유명했던 지역특성을 살려 산업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자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산학연계시설로 재탄생시켰다. 운영은 오타구 산업진흥협회가 맡고 있다.

입주대상은 ①학술기관과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중인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②지역산업 지원 학술기관, ③학술기관과 연계하여 신제품/신기술 실용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고, 사용기간은 사무실 규모에 따라 1년(심사 후 연장)~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입주자에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월세(사무실 규모에 따라 1만엔~6만엔 정도)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설은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출입구도 다르다. 한쪽은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으로 지역주민의 교류 및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교실과 과학실 등을 재활용한 사무실 공간이다. 진단약 개발업체, 전자회로 설계제작 업체, 플라스틱 도장막 연구업체, 멸균소독장치 개발업체, 의약관련 컨설턴트 등 다양한 소규모 벤처업체 10개사가 현재 입주중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본 시설에서 보육기간을 거친 업체는 인근의 아파트형 공장인 “테크노프론트 모리가사키(テクノフロント森ヶ崎)”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육을 마친 벤처기업이 심사를 거쳐 입주하여 안정되게 업체를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다. 본 건물은 한동에 제조업기반 업체부터 지식형 업체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바닥 하중, 동선, 사무실배치, 엘리베이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3. 후쿠오카시 Growth Next

후쿠오카시는 인구 약 158만 명의 규슈지역 제1의 도시로 후쿠오카현의 현청소재지이자 정령지정도시이다.

현 시장인 타카시마 소이치로(高島宗一郎)씨는 첫 취임(2010년, 현재 3선)부터 창업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기조 하에 2012년 스타트업 0.0(“스타트업도시 후쿠오카” 선언)→2014년 스타트업 1.0(국가전략특구 지정)→2017년 스타트업 2.0(관민공동형 스타트업 지원시설 Growth Next 개소)로 이어지는 스타트업의 흐름을 만들어나갔고, 특히 2014년 국가전략특구 중 “창업특구”로 선정된 것에 힘입어 창업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업지원시설 Growth Next는 2014년 폐교된 다이묘(大名)초등학교를 재활용하여 2017년 4월 개소했다. 다이묘 초등학교는 후쿠오카시청 인근에 위치할 정도로 도심에 있지만 도심 거주 인주 감소로 인해 폐교되었다. 시에서는 창업지원시설을 고민하던 당시, 편리한 교통환경, 높은 중심성, 도시재생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동 폐교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한다.

Growth Next의 운영은 후쿠오카시 외 3개 회사의 공동운영, 협력사는 Mistletoe, ABBALab 등 총 4개 사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시는 보조금 지원, 운영자는 인력지원, 협력사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누구나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자유석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 아파트형 공장 테크노프론트 모리가사키 |



있다. 시설내에는 스타트업 카페, FECC(후쿠오카 고용노동상담센터), FDC(후쿠오카 지역전략추진협의회), 인재매칭센터 등의 창업관련기관이 입주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등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후쿠오카시의 외국인창업이 압도적인 차이로 일본 1위인데, 그 핵심원인을 Growth Next내에 있는 관민연계 원스톱서비스 지원시설인 “스타트업 카페”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스타트업 비자(외국인창업활동촉진사업)’²⁾ 제도가 2015년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 비자 취득은 후쿠오카시에 집중되어 있다³⁾. “스타트업 카페”를 통해 외국인도 보증인이 필요없는 사무실 소개, 법률관련 전문가 중개 등, 세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일본은 학교가 폐교 처리되고 빠른 기간에 재활용 모델이 구축되어 폐교의 발생 시점에서 재활용까지의 시간과 공간의 낭비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건물의 노후나 훼손 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드웨어적 특징과 더불어 시설의 운영, 네트워크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특징도 중요하다.

도쿄도 오타구의 폐교 활용 산학연계시설의 경우, 저렴한 월세 외에도, ‘오타구 산업진흥협회-인근 토요대학 의학부-바이오관련 벤처기업’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입주업체가 시설 내에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본 시설에서 초기보육 후에는 인근의 아파트형 공장으로의 연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 창업자가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후쿠오카시 폐교 활용 창업보육시설 Growth Next의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라면 내국인/외국인 관계없이 쉽고 자유롭게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받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사), 제도(국가창업특구, 스타트업비자), 관련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벤처보육(대학내) → 벤처보육시설(도심) → 벤처타운(도심) →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 구축과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사례가 도심 폐교 및 유사 유휴시설의 활용에 힌트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 www.eduinfo.go.kr
2.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www.pio-ota.jp
3. Fukuoka Growth Next growth-next.com
4. 日経ビジネスOnline 2017.3・15. ‘外国人ベンチャー争奪戦、福岡市独り勝ちの理由’

본 글은 2016년도 및 2018년도 충남연구원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2)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실행되는 규제완화책. 통상 외국인 창업에 필요한 조건(500만 엔 이상 자본금, 상근직원 2명 이상 확보, 사무소 개설)을 6개월간 유예. 6개월 내에 조건을 갖추면 경영·관리비자로 전환.

3) '17년 2월까지 비자 취득 실적이 있는 도쿄도와 후쿠오카시 28명 중, 후쿠오카시가 24명.

01

상생과협력

수상태양광, 과연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 서천군 사례

홍성민 |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017년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간추리면 탈원전 탈석탄시대에 맞춰 2016년 기준 7.0% 밖에 안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찬성하고 반길만한 일이다. 응당 미래세대를 위해 펼쳐야 할 에너지 정책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선으로 올리기 위한 정부의 3020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별로 많은 저항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그중에 필자가 살고 있는 인구 약 5만 4천의 서천군도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이유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3020프로젝트’에 힘입어 이곳 저곳에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사업 허가 신청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산림에너지인 산과 숲을 간벌과 대체 작목 식재라는 이름하에 교묘하게 산림을 파괴하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직후 전 국토의 산림이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고 거기에 땔감용으로 벌채가 되어 알몸을 드러낸 민둥산이 허다했다. 하지만 1960년대 기점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의 푸른 국토를 만들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하에 부지가 넓고 토지 가격이 저렴한 산을 찾아 무차

별적으로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오다 보니 지역민들 저항에 부딪쳐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자 이번에는 수상태양광발전단지를 짓겠다며 동부저수지(봉선지), 주향저수지(배다리), 종천저수지(신검 및 상좌저수지)에 사업 허가신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했다. 이에 불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적극 반대 운동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왜 재생에너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기술하겠다.

충남 15개 시·군 중 서천군은 생태 도시이며 습지의 고장이다. 지형적 구조를 보면 동으로 저수지가 산재해 있고 서로는 갯벌이 있으며 남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북으로 울창한 산들이 뺨뺨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서천지사 관할 저수지 3곳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에 각각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동부저수지에 접한 마산면과 시초면 주민들은 주민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들어섰으며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대표회장 김종원)와 서천서천참여시민모임(대표 이강선), 서천참여연대(대표 김정태) 등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발전소 서천군 사업 신청 현황 소개 및 입지 지역 안내

1. 동부(봉선지)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현황	사업 입지별 현황(인구 및 세대수 2018년 8월 31일 기준)
1) 발전소 명칭: 동부지구 수상태양광 발전소 2) 발전소 위치: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26-3 일원 3) 설 비 용 량: 20MW 4) 설 비 형 식: 태양광 발전기 5) 건 설 공 기: 2020년 02월~2021년 2월(24개월) 6) 설 치 면 적: 240,100㎡ 7) 소 요 예 산: 약 360억 원 8) 추 진 기 관: 농어촌공사(대표 최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저수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남 서천군 시초면·마산면 - 인구: 시초면 708세대(1,324명), 마산면 790세대(1,580명) - 면적: 2,425,600㎡(732,000평)

| 동부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20MW) 위치도 |



위에서 언급한 동부저수지는 시초면민과 마산면민 약 80%가 농업과 밭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상태양광 설치하는 이들의 생계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현재의 동부저수지는 물벼슬나무로 유명한 곳으로 원앙, 고니,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금개구리, 가창오리가 서식하고 있다. 희귀 동식물 및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로 최근 국제적 관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 동부저수지이다. 이러 생태가치가 높은 동부저수지를 보존하고자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수년째 저수지 주변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주항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현황	사업 입지별 현황(인구 및 세대수 2018년 8월 31일 기준)
<p>1) 발전소 명칭: 주항 수상태양광 발전소</p> <p>2) 발전소 위치: 충남 서천군 서면 주항리 396-1, 산30</p> <p>3) 설 비 용 량: 2.5MW</p> <p>4) 설 비 형 식: 태양광 발전기</p> <p>5) 준 비 기 간: 36개월</p> <p>6) 설 치 면 적: 30,196㎡</p> <p>7) 소 요 예 산: 약 45억 원</p> <p>8) 추 진 기 관: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윤석근)</p>	<p>● 주항저수지 현황</p> <p>- 위치: 충남 서천군 서면</p> <p>- 인구: 서면 2,278세대(4,613명)</p> <p>- 면적: 316,800㎡(96,000평)</p>



| 주한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2.5MW) 위치도 |

3. 종천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현황	사업 입지별 현황 (인구 및 세대수 2018년 8월 31일 기준)
1) 발전소 명칭: 종천 수상태양광 발전소 2) 발전소 위치: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607, 산80-3 3) 설 비 용 량: 2.5MW 4) 설 비 형 식: 태양광 발전기 5) 준 비 기 간: 36개월 6) 설 치 면 적: 30,196㎡ 7) 소 요 예 산: 약 45억 원 8) 추 진 기 관: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윤석근)	● 종천저수지 현황 - 위치: 충남 서천군 종천면·판교면 - 인구: 종천면 1,191세대(2,169명), 판교면 1,204(2,260명) - 면적: 356,400㎡(108,0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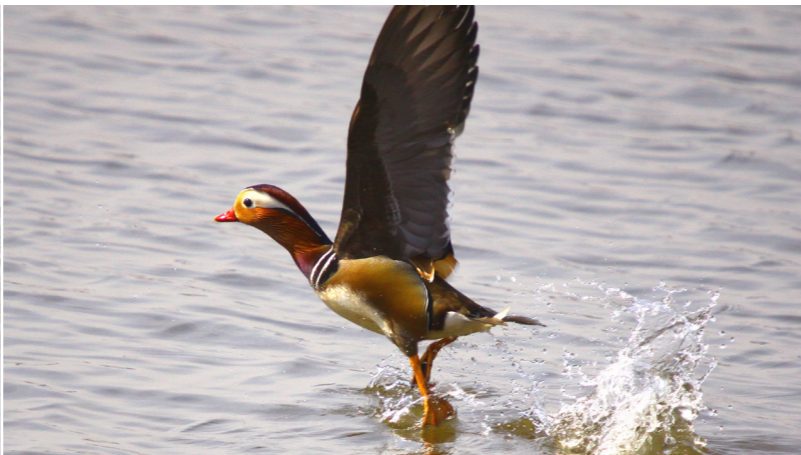
| 종천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2.5MW) 위치도 |

서면 주향저수지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매화마름과 천연기념물 201-2호 큰고니가 매년 찾아오고 있으며 최근 종천 신검리와 판교 상좌리 구간을 확대한 종천저수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살고 있으며, 최근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존가치가 훌륭한 저수지 습지에 제대로 된 환경토론회나 환경생태 조사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문제가 많다.



▲ 18년 2월 23일 시초면 봉선리 동부저수지 촬영한 국제적 멸종위기 2급 가창오리



▲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모습(동부저수지 촬영)



▲ 주항저수지에서 겨울철 서식하고 있는 큰고니 모습 (매년 12월 초에서 2월 초까지 서식)



▲ 종천저수지에서 일부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

◎ 주요 문제점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환경에 악영향

-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멸종위기 동식물 훼손 발생 우려
각 저수지 특유의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놀라운 습지를 보유하고 있음. 수년 동안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낚시 및 입어 금지를 통해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면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는 변화에 민감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저수지 수질 악화 우려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지에 우기 및 갈수기, 겨울철 동절기 시 조류 소통에 방해를 주어 수질 악화 초래로 이어질 수 있음.
태양광 모듈에 들어 있는 반도체 물질(납, 유리, 실리콘 등) 훼손 발생 시 이에 대한 안정성 및 수질 오염에 끼칠 악영향도 우려가 됨.
오히려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수질환경 개선 및 수변 생태계 고유 식물 서식처를 잠식하는 외래종 식물 퇴치를 통해 저수지 주변 환경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함.

○ 지역주민 갈등 및 마을공동체 붕괴 우려

- 수상태양광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 이장단 설명회를 통해 주항저수지와 종천저수지 이장들에게 주민 동의를 받아주면 수상태양광 발전용량에 따른 마을발전기금을 기탁하겠다고 하여 찬성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양분되어 갈등이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수상태양광 찬성 측 이장단과 이를 반대하는 주변 지역 이장단 및 주민이 갈라져 향후 이 사업 결과에 따라 마을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임.

산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산림을 훼손한다는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자 전국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는 핵발전소 및 노후화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급 확충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전력이 남아도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상황에서 농어촌공사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속셈이라는 것은 에너지분야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농민을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농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저수지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주기를 바란다.

01

오피니언1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정원영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위원회 연구위원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우리 민족사의 큰 물줄기를 이룬 기념비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며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첫째, 3·1운동의 정신은 비폭력 평화정신이었다. 1910년 일제에 병탄이 된 이래 일본 헌병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적 무단통치를 겪었는데도 총칼에 굴하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펼쳤다. 3·1운동은 1919년에 발발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당시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반제국주의 민중민주운동이 평화를 내세우면서 비폭력으로 전개된 사례가 없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지만 지주들을 살해하는 유혈 계급투쟁이었다. 3·1운동은 밑으로부터 터져 나온 비폭력 민중민주혁명이었으나 그것이 유혈적 계급투쟁은 아니었다.

둘째, 이러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국외로까지 확대되었다. 1919년 서울과 평양·신의주 등 지방의 7곳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 3·1운동은 성별, 종교, 신분, 나이 등의 구분 없이 온 백성이 참여했다. 50명 이상이 참가한 곳만 집계한 일제 측 통계는 3~5월 1542회에 202만 명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 전체 2000만 명의 1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 헌병과 경찰의 총칼에 맞서 비폭력 평화시위를 벌였다. 이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열렸던 ‘피리강화회의’에도 전해졌다. 그러나 열강들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민족자결을 인정하고 ‘대한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3·1독립선언에 따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당시 13도 대표 29명이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모여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는 임시정부를 세웠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제1조로 이어졌다. 왕정과 식민지를 넘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 법통의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100년 전 전체 인구의 10%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발적으로 3·1운동에 참여했기에 민주공화제의 가치가 더 돋보이는 것이다.



3·1운동(덕수궁 대한문 앞 만세시위)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원(1919년)

3·1운동 당시 이 같은 거족적인 평화운동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3·1운동이 전 세계 피식민지 약소민족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3·1운동의 소식 이 가까운 중국에 알려지면서 북경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5·4 반제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당시 간디와 네루 등 민족지도자들은 3·1운동을 ‘동방의 등불’로 표현했던 시성 타고르의 마음에 공감했을 것이다. 3·1운동은 계속해서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등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있던 다른 약소민족의 반제민족운동을 고양시키는 자극제 노릇을 하였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이 3·1 독립선언을 앞두고
천도교 간부들에게 다짐한 말 중

출처: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이러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단지 역사 속의 사실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오늘을 규정하는 현재적인 가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미래 100년을 설계해보는 큰 의미가 있다.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해 자유·평등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선열들의 피땀 어린 헌신에도 불구하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됐고 그간의 냉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분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적으로 개최되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게 되어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 당시 선언서에 조선의 독립이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에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처럼, 올해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02

오피니언2

3·1운동 남북기념사업, 천안시가 내놓은 뜻

조한필 | 천안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월 9일 남북이 함께 ‘순국 애국청년 합동추모사업’을 펼 치자고 제안했다.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고, 아우내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천안이 한반도 화해협력 관련 사업추진을 밝힌 것이다.

북한에도 유 열사와 비교될만한 어린 순국열사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1절 기념식 때 언급한 동풍신(여·함북 명천)과 평양감옥에서 옥사한 윤택진(황해도 재령)이다. 모두 국가보훈 처가 독립유공자로 추서했다.

3·1운동 당시, 소년·소녀의 만세운동은 거족적인 남녀노소 참여를 이끌어낸 기폭제였다. 이 때문 에 북한서도 유 열사의 ‘불굴의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해 『조선전사』등 역사책에 실고 있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공동사업으로 남북공동 기념행사, 공동 학술대회, 남북 대학생 평화대장 정,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향후 남북, 북미 협상 추이 등 정치상 황 변화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다소 차이가 있는 남북의 3·1운동 평가도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가 제안한 순국 애국청년 합동추모사업은 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린 순국 열사들을 추모하는 데 북한이 마다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100년 전 암울한 일제강점기 민족 최대 과제인 독립을 이루고자 10대 소년·소녀가 목숨까지 바쳤다. 이들을 함께 추모하자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유관순, 윤택진은 해방 직후 세상에 알려졌다. 1947년 2월 28일 자 경향신문 3·1운동 특집지면 은 ‘순국의 처녀’를 실었다. 소설가 박계주가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펼치다 순국한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을 처음 소개했다.

부모가 피살되고 서대문감옥에 갇혀서도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신념으로 옥중만세시위를 주도했다. 혹독한 고문에 결국 옥사해 처참한 시신으로 모교에 인도되는 유 열사를 그리고 있다.

한 달여 후 동아일보에는 윤택진 추념식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기억하는가 애국소년의 순국, 소 년소녀여 따르라 윤의사에’.

“4월 16일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3·1운동 때 황해도 재령군 남율면 해창리 출신 윤택진 (당시 16세)군이 만여 명을 영도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켜 만세를 부르며 왜적을 무찌르고 일헌(日 憲)에게 붙잡혀 극악무도한 고문을 받다가 평양감옥에서 옥사한 그해로부터 27년 만이다”라고 썼다.

해방직후 모든 정치세력은 3·1운동을 기념하고 나섰다. 남한에선 반탁·찬탁운동 등으로 분열된 좌우익 진영이 2년째 기념식도 별도로 열고 있었다. “27년 전 1919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순 국한 어린 소년·소녀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는 소리가 터져 나올만한 상황이었다. 유관순, 윤 택진 이야기가 처음 ‘발굴’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해 11월 27일, 유관순의 고향 천안 병천에서 아우내만세운동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독립운동 가들의 추도사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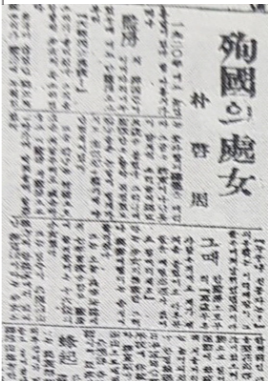
| 유림 | “우리는 처녀의 뜻이 실현되도록 죽음으로써 투쟁할 것을 처녀의 영령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맹서하나이다... 호국의 신이 되어 영원히 이 땅을 지켜주실 조선의 처녀시여.”

| 한훈 | “국토는 양분된 그대로 사상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진 이 착잡한 현상이 어찌 선 열들의 피 흘려 순국하신 독립정신이며 끼치신 뜻이리오. 송구스럽고 죄스러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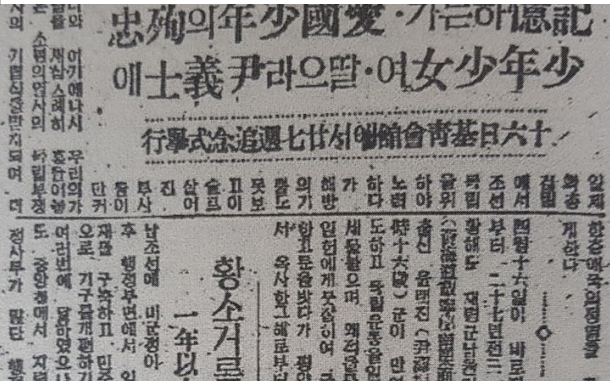
해방된 조국의 분열된 상황을 개탄하며 유관순 등 순국선열에 완전독립 쟁취를 맹서하며 또 애국 혼령들의 도움을 바랐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펴는 궁극적 이유도 70년 전과 다르지 않다.

남북한이 100년 전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때를 기억하고자 하는 뜻은 민족 동질성을 회 복해 평화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남북 공 동사업을 펴고자 한다.

경향신문 1947년 2월 28일자



동아일보 1947년 4월 17일자



NEWS

VOL.86
충남 소식

결식 우려 노인 급식 단가 증액... 온기 전한다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무료급식·식사배달 각각 3,420원, 4,735원 책정

#1

충남도가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3,000원에서 3,420원(경로식당)과 4,735원(도시락)으로 각각 증액하는 등 급식 질 개선에 나섰다.

3월 4일 도에 따르면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지원 사업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활동 가능한 60세 이상 노인 등이다.

식사배달(도시락)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등이다.

한편 도내 종합복지관 등 50곳에서는 하루 평균 3,700명의 어르신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종합복지관 등 71곳에서는 시군별 평균 2,900여 명의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도는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억 원 증가한 13억 원으로 편성, 급식 단가를 3,420원으로 인상했다.

또 도시락 질 개선을 위해서도 지난해 대비 3억 원을 추가 편성, 기존 3,000원에서 4,735원으로 단가를 올렸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료급식 확대·추진하겠다”라며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해 위생 관리체계 구축 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이동식 감시체계’ 강화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1대 추가 투입

#2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1대를 추가 투입, 대기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은 고정식 대기오염측정망으로 대기질을 측정할 수 없는 공단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등에 대한 대기질 조사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위한 사전 대기질 파악 등에 활용 중이다.

조사는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한 후 1개 지점에서 1주일 간 24시간 연속으로 대기질을 측정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를 분석·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 게시, 지역 주민, 시·군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이번에 새롭게 투입한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의 조사 지역 및 횟수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16회,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8회, 공업단지 주변 8회, 대기 민원 발생 지역 24회 등 총 23개 지점 56회다.

조사 항목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중금속류 등 총 3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신규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은 특히 중금속류(19종) 측정 장비를 새롭게 장착, 당진 철강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 대기질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1대로 도내 전역을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투입으로 대기오염 민원 발생 지역 및 우심 지역 대기질 조사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2대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이고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NEWS

VOL.86
연구원 소식

충남연구원, 3·1 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 한완상 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

#1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2월 11일(월) 오후 4시 연구원에서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위원회’ 한완상 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라며 이번 특강에서 ‘3·1운동의 현재적 의미’란 주제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100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9년은 1919년 3·1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한편, 한 위원장은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와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했다.



충남연구원, 양승조 도지사 초청 특강 가져 -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해결 연구 당부

#2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의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결에 충남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말했다.

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위기와 불확실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월 12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개최한 초청특강에서 양지사는 “충남의 높은 GRDP 등 희망적인, 상징적인 지표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도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연구를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정책연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공간 부족 문제 등 쾌적한 연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연구원을 둘러본 소감을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약 4배가 높고, 2018년도 출산율은 0.97로 추정되는

한편, 특강이 끝난 후 연구원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연구원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다양한 질문들에 허심탄회하게 대담하는 모습도 보였다.



NEWS

VOL.86
연구원 소식

●

윤황 충남연구원장, 백석대학교에서 특강 가져..
“100년 전의 3·1운동, 세계평화를 주도할 정신”

#3

3월 13일 충남연구원 윤황 원장은 백석대학교와 “실질적 학·연
연계를 통해 포용국가로 함께 나아가자”며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세계평화’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윤 원장은 백석대학교 재학생 백여 명이 모인 강당에서 백석의
의미로 특강의 포문을 열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백석의 정
신으로 3·1운동을 이끈 역사를 이어받아 미래를 이끌어 갈 인
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3·1운동 전후의 세계정세와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독립선언문 낭독 영상을 통해 지나간
역사로만 기억하면 안 될 3·1운동의 평등과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3·1운동의 영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과 임시
정부 헌장에 기록된 전 인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한 건국 정신
을 전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비폭력 정신이
2017년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
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오는 4월 5일 연구원에서 ‘3·1운동 및 대
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하며, 중
국 ‘용정 3·13 만세운동’과 관련, 중국 하북성과 공동 학술 세
미나 및 추모행사를 계획 중이다.

▼ 백석대학교에서 ‘3·1운동 100주년과 세계평화’ 주제 강연 중인 윤 황 충남연구원장



충남의 사계 — 봄

봄꽃

하늘 가득
봄꽃이 웃는다
함께 웃는 나도
꽃이 되었다

공주역사박물관에 핀 벚꽃

作. 충남연구원 정봉희

